

그리스처럼, 신자유주의 공세를 거부하자

제2차(7·15)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라

▶ 관련 기사 6~9 면

정부는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철회하라

▶ 관련 기사 16면

그리스 국민투표와
이후 투쟁

2~3 면

민주노총 7·15 파업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투쟁

6~9 면

탄저균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13 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논쟁

12 면

노동당 당대회와
4자 통합

10~11 면

메르스와 노동계급

16 면

그리스 국민투표, 긴축안 부결

전 세계 노동자들이 나아갈 길을 보여 주다

차승일

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6월 25일 국제 채권단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EC, 유럽중앙은행 ECB, 국제통화기금 IMF가 내놓은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구제’ 금융을 다섯 달 더 연장하는 대신 혹독한 긴축을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미 반토막 난 연금을 더 삭감하고, 저소득 노인에게 주는 연금을 폐지하고, 부가 가치세를 인상하고, 민영화를 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제 채권단은 그리스 시리자 정부가 절실하게 요청한 채무 완화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이처럼 긴축만 강변하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탐욕스런 태도가 국민투표 실시의 첫째 요인이다.

그러나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옹고집은 현실적 근거가 없다. 지난 5년간의 경험은 그리스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서도, 부채를 갚아 줄여 나가는 데서도, 긴축이 오히려 장애물이었음을 증명한다. 사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적게는 2백24억 유로에서 많게는 4백5억 유로(약 50조 원)씩 갚아 왔다.”(〈한겨레〉 김지은 기자, 2015년 7월 1일치) 그런데 같은 기간 부채는 2009년 3천10억 유로에서 2014년 3천1백70억 유로로 늘었다. 국내총생산은 4분의 1이 줄었다.

긴축의 실패

긴축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사실은 IMF 자신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재정 긴축과 통화 팽창을 함께 권고한 정책 조합은 결국 경기 회복을 제대로 뒷받침하지도 못하면서 부정적인 효과만 키웠다.”

그럼에도 유럽연합 지배자들이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하는 데는 경제적·정치적 이유가 있다. 경제적으로는, 유럽중앙은행 자신이 최대 채권자로서 빌려준 돈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적 이유다. 시리자 정부가 긴축을 중단한다면 긴축과 시장 지향적 정책을 거부하는 흐름이 유럽 전역에서 거세질 것이다. 스페인의 포데모스 등 좌파 정당의 성장세가 더 확연해질 것이다.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 타협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은 이미 2월 20일에 명확히 드러났다. (‘구제금융 연장 합의가 시리자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노동자 연대〉 143호를 참고하십시오.) 그러므로 유럽연합 지배자들과 협상을 벌여 긴축을 끝내려 한 시리자의 개혁주의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시리자는 집권 전 주장과는 달리 부채를 모두 갚겠다고 했고 유럽연합과 유로존에서 나올 생각도 없음을 분명히 했으므로(즉,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게임의 룰’을 거스를 생각이 없었으므로) 후퇴에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민투표 실시는 시리자가 자신의 전략이 실패했음을 사실상 실토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반대”(OXI) 6월 29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긴축안 반대 시위.

국민투표 실시는 노동자 투쟁이 낳은 효과다

그리스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 더 중요한 요인은 그리스 노동자들의 투쟁과 압력이었다. 서른 번 이상의 총파업을 벌이는 등 강력한 투쟁으로 사회를 좌경화시키고 결국 시리자를 권좌에 올린 그리스 노동계급은 시리자 집권 뒤에도 중요한 투쟁을 계속 벌여 왔다.

재무부 청소 노동자들과 국영방송국 노동자들은 복직 약속을 이행하라고 투쟁했고, 피레우스 항구 노동자들은 시리자 정부가 공약을 어기고 민영화

를 추진하는 것에 반대해 파업을 벌였고, 병원 노동자들은 투자와 인력을 대폭 확충하라고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시리자 정부가 유럽연합 지배자들과의 합의를 바라며 거듭 후퇴하는 것에 반대해 좌파들이 조직한 운동도 있었다.

아래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총리 치프라스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도 합의안에 서명할 수는 없었다. 이를 두고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6월 27일 발표한 성명서

에서 이렇게 평가했다. “이런 사태 전개는 그동안 [긴축을 강요하는 국제 채권단과의] 양해각서에 반대해 싸워 왔고, 또 새로 체결되려 하는 양해각서에 반대해 싸우는 사람들 모두에게 한 걸음 전진을 뜻한다.”

그러나 치프라스는 끝까지 동요했다.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지 나흘 만에 국제 채권단의 제안을 사실상 모두 수용하겠다고 국민투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넌지시 내비친 것이다. 이 시도는 독일 총리 메르켈의 단

호한 거절로 수포로 돌아갔지만, 시리자 지지자를 비롯해 긴축에 반대해 거리로 나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였다.

이런 사정과 지난 다섯 달의 경험을 돌아보면, 국민투표 실시를 치밀한 계산 속에서 나온 “승부수”나 “신의 한 수”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관성 있는 전략보다는 즉흥적 전술”이라는 말이 치프라스의 행동을 잘 요약한다”는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지적이 더 타당하다.

격렬하게 벌어지고 있는 찬반 논쟁

그리스 노동자들과 대다수 좌파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긴축 강요에 크게 분노하며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그리스어로 ‘반대’는 ‘오히(OXI)’이다.

6월 29일 월요일 그리스 아테네 국회의사당 앞 신타그마 광장에 군중 2만 5천 명이 모여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협박과 긴축 강요를 반대한다고 외쳤다. 최근 몇 년 사이 벌어진 가장 큰 시위였다.

특히, 그동안의 긴축으로 사정이 매우 나빠진 병원 노동자들의 긴축 반대 정서가 크다. 병원 노동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실업률이 높고 복지가 삭감돼 사람들의 소득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먹지 못해 병원을 찾는 아동이 많습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긴축 때문에 우리는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슈퍼맨이 돼야 했습니다.”

우파들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반대운동의 큰 집회가 열린 바로 다음날, 우파들도 신타그마 광장에서 찬성 시위를 벌였다. 특히, 지난 40년 동안 그리스 정치를 지배해 온 우파 정당 신민당

이 찬성 운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찬성 운동을 통해 재기를 꿈꾸는 것이다.

우파들은 찬성 운동을 통해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이 남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을 나가면 큰 곤경을 겪게 되리라는 협박이다. 밀실에서 비공개로 협상하며 ‘언론 플레이’를 할 때만 조금씩 정보를 흘리는 비민주적인 유럽연합 지배자들도 국민투표 실시에 큰 분노를 표하며 같은 협박을 하고 있다. 이런 협박의 효과를 무시할 수는 없다. 긴축을 강요하는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큰 반감을 느끼면서도, 강력한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에서, 출퇴근길 지하철과 버스에서 찬성이나 반대냐를 놓고 토론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시리자는 국민투표에서는 반대표를 찍자고 주장하지만, 그리스가 유럽연합과 유로존에 남아야 한다는 데서는 확고한 입장이므로 그들의 논리로는 우파들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물리치기가 힘들다. (유럽연합에 관해서는 12면의 관련

기사를 참고하십시오.)

또한 국민투표를 둘러싼 논쟁은 좀 더 근본적인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그리스 정부는 은행 영업을 중지시키고 일부 자산을 통제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되면 이 조치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닐까? 이 조치가 현금이 필요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 기업주와 부자들의 자본 도피를 실질적으로 막으려면 은행 운영권을 노동자가 가져야 하는 것 아닐까?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즉, 국유화와 노동자 통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리자 바깥 좌파의 개입이 중요하다.

이 점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둘 다 자본의 이익과 자본가의 이윤에 복무한다”며 기권표를 던지자는 그리스 공산당의 입장에는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은 긴축에 맞서 싸우려는 대중과 관계를 맺지 못해 그들을 더 좌파적인 정치로 이끌지 못한다는 점에서 무기력하고, 또 반대 운동이 승리해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오르면 그만큼 투쟁을

더 전진시키기가 쉬울 것임을 보지 못하며 뒷집만 지고 있다는 점에서 미련하다. 또한 찬성 운동이 승리하면 우파가 다시 성장하고 유럽연합 지배자들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이라는 점에서 운동에 무책임하다. 그리스 공산당은 “투표용지에 공산당의 정책을 적어 투표함에 넣자”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제안하고 있을 뿐이다.

추천 책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 좌파 정부는 긴축을 끝낼 수 있는가

알렉스 캘리니코스, 스타티스 쿠벨라키스 외 지음, 차승일 역음, 책갈피, 232쪽, 12,000원



"부채를 탕감하라. IMF는 물러가라"

출처: (아) XOX sees across Europe sees XOX

긴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

멀리 타국에서 관찰하는 처지여서 조심스럽지만 국민투표에서 긴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세계은행 부총재를 지냈고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프 스티글리츠나, 역시 케인스주의자로 <뉴욕 타임스>의 유명 칼럼니스트였고 역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먼 같은 사람도 반대표를 던지는 것이 옳다고 주장한다.

<한겨레>에 따르면, "스티글리츠는 '구제금융 연장' 안을 가결하는 것은 거의 끝없는 침체를 의미할 것'이라며 '부결시키는 것은, 적어도 탄탄한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그리스가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거머쥐는 가능성이랄라도 열어 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크루그먼도 '더 강도 높은 긴축은 막다른 골목'이라며 '그리스

시민이 구제금융안에) 찬성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 기층의 정서일 것이다. 유로화 문제 등에 대한 혼란된 입장 때문에 "내 심장은 반대표를 던지라고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노동자들이 꽤 있다. 하지만 전체로 보아, 긴축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더 큰 듯하다. "그들은 그리스가 유로존을 떠나면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재앙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지도적 활동가인 파노스 가르가나스는 이렇게 전망했다. "국민투표는 힘겨운 투쟁이 될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강하게 압박하고 시리자 정부는 타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 운동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대중의 분노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국민투표 이후: 여전히 계급투쟁이 결정적이다

긴축안 부결로 그리스 노동자들은 다시 한번 긴축 거부 의사를 천명할 것 같다. 이는 유럽 곳곳에서 시장 지향적 개혁을 강요하는 유럽연합 지배자들에게는 큰 타격이 될 것이다. 정치적 재기를 노리는 그리스 우파들도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 국내외 노동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고, 긴축 반대 투쟁의 좋은 발판이 될 것이다. 임금과 연금을 깎고 해고를 쉽게 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싸우는 한국 노동자들에게도 힘을 줄 것이다.

그럼에도 상황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이미 시리자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에서 보듯이 '구제' 금융은 그리스의 노동자와 서민은 구제하지 않는다. 그리스 정부에 돈을 빌려준 은행들을 '구제'한다. 국제 채권단이 2차에 걸쳐 그리스 정부에 지급한 구제금융 2천4백억 유로(약 3백조 원)의 90퍼센트 이상이 유럽 은행들에게진 빚을 갚는 데 쓰였다. 그러므로 "지원금 3백조 원도 탕진 ... '공짜 복지 좋아하다 이 지경까지'라는 <조선일보>의 주장은 헛소리다.

쉽게 말해, 그동안 그리스 정부는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처음 빌린 돈을 사실상 다 갚았는데도

빚이 늘어난 것이다. 그러는 와중에 시행된 긴축으로 그리스 노동자 임금은 20퍼센트 깎이고 연금은 반토막이 났다.

카드 돌려막기

따라서 3차 구제금융을 반대해야 한다. 그런데 3차 구제금융에서는 IMF가 제외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리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관철된다면 국민투표 승부수의 역사적 성과라고 할 만하다"라거나 "완전히 새로운 구제금융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대한 논의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된다"며 3차 구제금융 논의에서는 시리자 정부가 무언가를 도모해 볼 수 있는 듯이 바라보는 얘기가 나왔다. 독일 총리 메르켈이 국민투표 이후에 얘기하자고 해 일단은 논의가 멈춘 상태이지만, 이런 관점은 위험하다. 구제금융의 본질을 호도하기 때문이다. 또, 그리스에 긴축을 강요하는 데서는 독일 총리 메르켈 등 유럽연합 지배자들이 IMF보다 더 강경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의 앞날을 좌우할 가장 결정적 열쇠는 역시 계급투쟁이 쥐고 있다. 긴축안 부결로 상승한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더 큰 투쟁으로 발전한다면 상당히 다른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

급진적이고 대담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는 실현 가능하다

3천억 유로(한화 약 4백조 원)에 이르는 부채를 모두 갚아 나가면서 긴축을 중단시킬 수 있을까? 그것도 경제가 회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시리자 전략의 핵심 모순이 바로 이것이다. 시리자는 긴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모순을 해소해왔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① **서민을 위한 디폴트**: 그 시작은 디폴트(채무불이행)다. 부채를 상환하면서 긴축을 중단시킬 방법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주장에 대해 좌파 사이에서 제기되는 반론은 '디폴트를 하면 오히려 노동자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그럴 수도 있다. 디폴트의 결과가 노동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화폐 가치 절하로 말미암은 인플레이션과 실질임금 삭감 효과다.

그러나 디폴트의 결과는 정해진 것이 아니다. 투쟁의 결과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다. 앞에서 말했듯이, 지난 5년 동안 그리스는 해마다 최대 4백5억 유로(약 50조 원)를 빚 갚는 데 썼다. 디폴트로 부채 상환을 중단하면 그 돈을 다른 곳에 쓸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그리스 부채를 해결할 대안은 무엇인가, <노동자 연대> 145호를 참고하시오.)

현재 그리스 정부는 6월분 부채를

상환하지 못해 사실상 디폴트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봐도 부채 상환 중단 요구는 중요하다. 시리자 정부가 3차 구제금융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② **유로존 탈퇴**: 마찬가지로 이유로 그리스가 유로존에서 나오는 것, 일명 그렉시트(Grexit)도 필요하다.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정부 부채를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60퍼센트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유로존에 남는 것 자체가 긴축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재 그리스의 정부 부채 비율은 175퍼센트다.

일부 좌파는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진보적으로 보거나, 적어도 고쳐서 노동자들의 이익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대중에게 전혀 책임지지 않는 기구들로 이뤄져 있고, 긴축과 시장 지향적 정책의 선두주자인 독일이 주도하는 유로존과 유럽연합을 고쳐 쓸 수 있다는 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면 안 되는가?', <레프트21> 69호를 참고하시오.)

③ **은행 국유화와 자본 통제**: 이렇게 부채 상환을 거부하고 유로존에서 탈퇴하면 기업주와 부자들은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 할 것이다. 이것을 막으려면 자본을 통제해야 한다. 현재 그리스 정부가 국민투표를 앞두고 한시적으로나마 은행 영업 일부 중단, 하

루 인출 가능 금액 제한, 일부 자본 통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은행들이 자본 통제 조처를 어기는 것을 막으려면 결국 은행 국유화가 필요하다.

④ **노동자 통제**: 그러면,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자 통제 문제가 제기된다. 국유화된 은행이 기업주와 부자들의 자본 해외 유출을 막으면서 생필품 구입이 필요한 노동자들에게 현금을 공급하게 하려면 운영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통제 문제는 현재 병원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예금 인출 제한으로 환자들이 현금 없이 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때 이 환자를 무료로 치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6월 29일 아테네 전역의 병원 노동자들이 모여 현금 없이 내원한 환자들이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자고 노동조합에 요청한 바 있다.

이런 조처들을 시행하려면 강력한 계급투쟁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 요구들은 긴축을 중단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안이기도 하지만, 투쟁을 고양시켜 투쟁이 자본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으로까지 나아가게 한다는 점에서 전환적 강령(소위 '이행기 강령')의 성격도 있다.

이 요구들로 운동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시리자로부터 독립적인 혁명적 좌파를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긴급 토론회

국민투표 구제금융안 부결 이후 그리스 상황

7월 8일(수) 오후 7시 30분 |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10호

주최: 노동자연대 | 참가비: 5,000원 | 문의: 02-2271-2395, mail@workerssolidarity.org

연사: 안효상 월간 <좌파> 편집위원, 노동당 고문

차승일 <노동자 연대> 국제 담당 기자, <그리스 외채 위기와 시리자의 부상>(책갈피, 2015) 역은이

7월 5일 그리스에서는 국제 채권단이 제안한 구제금융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를 묻는 국민투표가 실시됩니다. 강력한 긴축을 요구한 구제금융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그리스에서는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까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그리스의 정치·사회운동·좌파의 현황과 전망을 토론했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전쟁 동맹을 강화하고 있는 제국주의 수호자들 2014년 3월 네덜란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

사진 출처: 청와대

한·미·일 삼각 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친 박근혜

김영익

지난 6월 22일 박근혜는 주한 일본 대사관이 주최한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박근혜는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화해와 상생의 마음으로 내려 놓"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기가 막히게도, 박근혜한테 위안부 문제 해결은 거 추장스럽고 "무거운 짐"에 불과한 것이다.

이날 일본 총리 아베도 주일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기념 행사에 참석했다. 거기서 아베는 "한국과 일본의 협력 강화, 한·미·일 3국의 협력 강화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하다"며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했다.

이처럼, '과거사 청산 수위 및 방식'에 대한 이견은 남아 있지만, [한·일 양국 정부가] '미래로 가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평화네트워크 정육식 대표). 그리고 '미래로 가자'는 미국 정부가 정확히 바라는 바였다.

최근 아베 정부는 군국화에 더욱 박차를 가해 왔다. 그래서 미국과 손잡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선에서 선봉장을 자임해 왔다. 이를 위해 아베 정권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해석 개헌'을 감행했다. 그리고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한 데 이어, 위헌 논란 속에서 안보 관련 법제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

아베는 일본 국민 다수가 안보 관련 법제 개정을 반대하는 것에도 아랑

곳하지 않는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일본 자위대가 이번에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근거로 한반도에 군사개입을 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는 것도 무시한다.

따라서 아베한테 과거사 문제는 자국이 제국주의적 행동을 하는 데 걸림돌일 뿐이다. 지난 4월 미국 방문 때 아베는 위안부 문제를 개인들 간의 "인신매매"쯤으로 취급하며 일본 국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도 과거 식민지 지배와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연설에서 아베는 일본이 그동안 동아시아 경제 발전에 기여했다고 강변했다. 올해 8월 담화를 내놓겠다고 했지만, 방미 당시 아베의 언행만 봐도 그 담화에 담길 내용이 어떨지는 짐작이 된다.

박근혜는 왜?

바로 이 와중에 박근혜는 아베에게 손을 내밀었다. 사실, 한국의 역대 통치자들은 모두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일본 지배자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려 애썼다. 한국이 일본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켜 온 데다가 한·미·일 삼각동맹 때문에 한국 지배자들과 일본 지배자들의 이해관계가 긴밀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50년 전 박근혜의 아버지 박정희는 거센 반대 목소리를 짓밟고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맺었다. 그 이후에도 한국의 역대 정부들은 한·일 관계에 대해 과거를 덮고 '미래로 가자'고

말해 왔다.

결국 박근혜도 한국 지배계급의 이익과 한·미·일 삼각동맹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들의 오랜 염원을 저버렸다.

박근혜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적 관계를 의식했을 것이다. 여전히 한국은 수출 상품에 필요한 많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고, 한국에 들어오는 전체 외국인 투자 가운데 일본의 투자가 미국 다음으로 많다.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한국과 일본 기업이 함께 진출하는 사례도 많다(전경련 이슈페이퍼, "韓日 국교정상화 이후 양국 경제협력 성과와 과제", 2014년).

무엇보다 군사 동맹 문제가 있다. 물론 동아시아에서 제국주의 간 긴장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커다란 압박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긴밀해진 경제 관계 때문에 한국 지배계급의 처지가 과거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조처들을 지지하고 있다. 세계 최강 미국에 협력해 한국 국가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안보적 이익도 얻으려는 것이다.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압하려고 노골적으로 일본의 등을 밀어 주고 있다. 과거사 왜곡마저 두둔하면서 미국은 일본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개선'해 대일 군사 협력도 강화하라고 촉구해 왔다. "[한·미·일] 3국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미국

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의 핵심 요소"(미국 국방장관 애슈턴 카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한국의 안보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도 강조해 왔다. 지난 4월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선임부소장 마이클 그린은 이렇게 주장했다. "새 [미일 방위협력] 지침이 한반도 안보를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강화할 것이며 그 어떤 새로운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중앙일보》, 4월 24일)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대중국 견제 노력에 협력하는 한, 한·일 간의 군사 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다. 그래서 국내 여론의 반발 등을 의식해 지금까지 한일 정상회담을 미뤄 왔을 뿐,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의 군사 협력을 계속 진전시켜 왔다. 예컨대 4월 중순에 사상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가 열렸고, 연이어 한·미·일 3자 국방회의(DTT)도 있었다. DTT에서 한국 정부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에 지지를 나타냈고, 외교차관 회의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3국 협력을 강화하는데 합의했다.

남중국해

박근혜는 미뤄 온 한·일 정상회담마저 추진할 것 같다. 유홍수 주일 한국대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 [한·일] 정상회담 실현을 위한 전제가 아니"라며 연내 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힌 적이 있다. 일본 외무성 외무심의관 스기야마 신스케도 일본

정부가 올해 9월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올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미국이 지지하는 한·일 간의 군사 협력 문제는 더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견제 문제가 그렇다. 지난 6월 3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대니얼 러셀은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한국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는 일본의 군사 활동이 활발하다. 일본은 미국의 지지 속에서 필리핀 등 남중국해 주변국들과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필리핀과의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고 자위대의 남중국해 순찰 가능성도 거론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중국을 노골적으로 견제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미국은 남중국해 문제에서도 한국이 일본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셈이다.

한·일 간의 군사협정 문제도 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과 한·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 점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 일본 정부가 주장해 왔다. 그래서 앞으로 한·일 관계 '개선' 과정에서 한·일 군사협정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은 아주 높다.

박근혜·오바마·아베가 열려는 '미래'는 우리가 바라는 평화로운 미래와 정반대다. 그들이 가리키는 쪽은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불안정을 더욱 악화하는 방향이다. 박근혜의 대일 정책을 규탄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 강화를 반대해야 한다.

경제적·지정학적 위기 심화로 여권의 분열도 심각해지다

김문성

박근혜와 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승민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현직 대통령이 집권 여당 원내대표를 찍어내겠다고 한다.

공무원연금 개악의 대가로 야당이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유승민이 수용한 것이 계기였다. 행정부의 시행령, 시행규칙이 국회가 만든 상위법에 위반될 때는 국회가 개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이다.

박근혜는 국회법 개정이 시행령으로 국정을 추진해 온 자신의 통치 행위에 제동을 거는 것으로 봤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각종 개악을 행정입법*에 의존해 왔다. 거추장스러운 국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청와대와 행정부가 바로 개악을 추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애국법 등 반민주적 조치와 신자유주의 조치들을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의존했던 미국 부시 정권과 비슷한 수법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시행령 25개가 상위법을 위반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매일노동뉴스>는 특히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령이 ‘월권 백화점’이라고 이름 붙였다.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것도 바로 이 시행령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임금피크제 도입 등을 사측이 일방 추진할 수 있게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의료민영화를 간접적으로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령도 문제다.

시행령을 앞세워 자본가들을 위한 고통전가 개악 드라이브를 추진해 온 박근혜에게 개정 국회법이 매우 성가신 방해물이었을 것이다. 안 그래도 노동자 투쟁, 세월호, 정윤희 의혹, 메르스 공포 등으로 지지율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당 지도부가 야당과 합의해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박근혜는 레임덕 위기감을 느꼈을 것이다.

역설이게도 박근혜의 히스테리는 오히려 박근혜가 여당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 됐고, 정치 위기를 증폭시켰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권 내 갈등은 좀 더 근원적인 배경을 갖고 있다.

유승민은 올해 원내대표 당선 직후, 박근혜가 말해 온 “증세 없는 복지”를 “허구”라고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을 의식해 조심스러운 청와대와 달리 사드 도입을 공공연히



진퇴양난에 빠진 여당 지도부.

주장해 왔다. 지난해에는 “청와대 얼라들”에게 “일관된 국가안보전략”이 없다며 단호한 한미동맹을 요구하기도 했다.

따라서 여권 내 갈등은 세계경제 위기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갈등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 내의 불안감과 이견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사태의 심화·발전으로 지배자들이 2012년 대선 때처럼 박근혜를 일치단결해 지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공천 숙청

그러나 사실상 정계은퇴를 요구하며 유승민과 비박계의 퇴로를 막아 놓은 탓에 갈등이 쉽게 봉합될 수도, 항복을 받아낼 수도 없는 처지가 됐다. 박근혜가 ‘선거 심판’을 운운한 탓에 유승민은 물론이고 김무성 등 비박계는 여기서 물러서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 숙청을 당할 거라고 걱정한다. 이는 부르주아 정치인들에게는 양보하기 힘든 이해관계 문제다. 게다가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와 달리 차기 총선과 대선을 염려해야 하는 의원들은 여론과 노동운동의 저항 태세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갈수록 박근혜의 지시가 잘 먹히지 않는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는 지배계급 내 반대를 무릅쓰고 황교안을 총리로 앉혀 놓은 것이다. 황교안은 노동운동과 사

회 운동에는 공안 통치를 시도하고, 여야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정치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사정 정국을 펼칠 수 있다.

물론 이런 여권 분열 상황에서도 박근혜는 각종 개악을 밀어붙이는 한편, 집권당 분열이 노동운동에 자신감을 줄까 봐 탄압도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탄압이 강력함을 뜻하기보다는 정치 위기의 발로임을 앞서 지적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박근혜의 위기와 여권의 분열을 신자유주의 공세 거부 투쟁을 조직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노동운동이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을 보편화하려는 공격에 더 격렬하고 단호하게 맞서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권의 내분을 봉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런 공격의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여권 내 갈등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 박근혜가 여당의 원내대표를 정권의 걸림돌이라고 공개 선언한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얼마나 피죄 죄한지를 보여 준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진정한 야당은 투쟁하는 노동운동이라는 것을 보여 줘야 한다. 지금까지 각종 민영화, 노동조건 개악 시도, 복지 삭감 시도에 진정한 조직된 반대를 제공한 것은 조직 노동운동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노동운동은 박근혜의 고통전가 공세를 막아낼 만큼 충분히 잘 싸우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예고한 7월 파업뿐 아니라,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공공부문 2차 정상화 조치를 막을 저항 구축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여권 내 분열을 이용해 노동운동을 전진시키자.

추경으로 경제가 살아날까?

기업 퍼 주기 정책 중단하라

정선영

최근 박근혜 정부가 12조 원가량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발표했다. 여기에 공공 기금 변경을 통한 지출 확대와 공공기업 투자 확대, 금융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22조 원에 이르는 재정 보강 정책을 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공무원연금 삭감 등으로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해 왔다. 그런데 이번엔 재정 적자를 감수하며 추경을 발표한 것은 침체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 때문에 살아나던 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했지만, 경제는 그전부터 침체하고 있었다.

메르스 사태가 터진 5월 전체 산업생산은 4월보다 0.6퍼센트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설비투자도 3개월 연속 줄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3.4퍼센트로 2009년 5월 이후 7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최근의 경제 위축은 수출 감소 때문이다.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에 견줘 감소해 올해 상반기 수출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5퍼센트나 줄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1~4월 세계 70개국의 수입시장 규모가 13.4퍼센트 줄었다고 밝혔는데,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와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세계 무역 규모가 줄고 있다. 게다가 그리스 디폴트 위기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미칠 수 있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메르스 극복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 퍼 주기 정책으로 가득 차 있다.

정부는 메르스 대응에 2조 5천억 원을 배정했지만 이 중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 지원’에 사용되는 돈은 1천억 원에 불과하다. 그보다 훨씬 많은 6천억 원은 메르스 사태를 통해 손실을 입은 병원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데 사용된다. 게다가 관공업체와 수출업체 지원에는 무려 1조 6천억 원이 배정됐고, 수출 기업에 금융 지원을 하는 데 4조 5천억 원이 배정됐다.

또 도로 확장 등 노골적으로 건설 기업들에 퍼 주기 위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에도 1조 3천억 원이 책정됐다.

일자리 추경?

정부는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 내놓은 정책은 청년인턴제 확대,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5천7백 명 → 1만 2천7백 명) 등 한시적이고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일 뿐이다. 눈높이를 낮춰 중소기업으로 취업하라는 중소기업 취업 알선 프로젝트(노후산단 희망 프로젝트) 등은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들의 한숨만 늘릴 뿐이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 확충이라는 이름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정책도 내놔다. 청년과 고령 노동자들을 이간질해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정부는 추경을 통해 기업에 막대한 재정을 퍼 주고, 노동시장 구조조정 정책을 뒷받침하려 한다.

그러나 기업들에 돈을 쏟아붓는다고 경제가 살아나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미 2013년에 17조 원에 이르는 추경을 편성했지만 일시적인 부양에 그쳤다. 세계 자본주의의 구조적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기업 퍼 주기 정책은 양극화 심화로만 이어지고 있다.

고장 난 시장 경제를 살리려고 이런 막대한 돈을 밀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 직접 사용한다면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

만약 이번엔 쓰는 돈 22조 원을 기초연금을 인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1년 동안 기초연금을 지금의 3배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돈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4백만 명에게 직접 준다면 1인 당 1년에 5백50만 원의 임금을 인상할 수 있고, 연봉 3천만 원인 노동자를 70만 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로 공무원연금을 삭감하고,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에게 내핍을 강요하고 있다. 또 법인세는 늘리길 거부하면서 담뱃세 인상, 소득세 인상 등을 통해 노동자와 가난한 사람들에게 증세를 했다.

노동자들을 쥐어짜 기업들의 이윤을 보전해 주는 정부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



여당의 분열을 신경질적으로 부각시킨 박근혜.

법외노조 저지 위해

전교조도 7·15 민주노총 2차 파업에 동참하자

김연오 전교조 조합원

5월 28일 헌법재판소가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그 뒤 대법원은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가 처분 인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이제 전교조는 효력정지가처분 판결과 함께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들에 대해 신속하게 판결할 거라는 예상이 많았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효력정지가처분 판결에 대해서도 전교조에 공개 변론 기회를 줄지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좌우 격돌을 부를 첨예한 사안이어서 정치적 부담을 느낀 법원이 신중을 기하는 거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물론 재판 결과를 결코 낙관할 수는 없다. 현재가 법외노조 통보의 법적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2조를 합헌이라고 결정했고, 1심 재판부도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권이 전교조에 “노조 아님”이라고 통보하는 데 사용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에 대해서는 현재와 대법원 모두 판결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직 법외노조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 법적 승산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지레 발을 빼서는 안 된다. 법외노조화를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총력 투쟁해야 한다.

조합원들이 참가할 수 있는 투쟁 계획 필요

그런 점에서 최근 전교조 지도부가 지회장 240명의 선언(‘서울고등법원은 정부의 부당한 전교조 탄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을 조직해 발표한 것은 좋았다.

또, 현재 전교조는 ‘참교육 전교조 지키기-노동기본권 쟁취 조합원 선언’을 5만 명을 목표로 조직하고 있다. 또 전교조 지키기 100만 시민 서명이 시작됐고, 법원 앞 1인 시위와 거리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다. 고등법원이 효력



4·24 연가투쟁 정부 공격을 막아내려면 평조조합원들도 참가하는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정지가처분을 기각하면 즉시 전국 지회장 결의대회도 할 계획을 세워 두고 있다.

이에 더해 평조조합원들도 참가하는 대중 행동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파업을 호소하고 있다. 전교조도 이 호소에 부응해 조합원들이 참가하는 조퇴나 연가 투쟁을 하자. 민주노총은 2차 총파업을 조직하며 노동기본권 쟁취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들은 모두 전교조에도 해당된다. 정부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밀어내려 할 뿐 아니라 교원평가 제도를 추가 개악하려 한다.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 근무평정(승진과 관련된 평가 제도)과 성과급을 통합한 ‘교원업적평가’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교원평가의 강제

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 훈령’을 만들겠다는 안도 발표했다.(6면 하단에 실린 관련 기사를 참조하시오.) 이런 교원평가 제도 추가 개악 시도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전교조는 성명을 통해 “교육 주체들, 그리고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교육부문의 구조조정을 분쇄하는 투쟁을 전개함으로써 성과급과 교원평가의 폐지를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7월 15일 민주노총 2차 파업이 그런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따라서 7월 15일 총파업에 전교조가 동참해 법외노조 탄압에 항의하고 교원평가 개악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지금 학기 말 업무로 학교가 정신없이 바쁘고 연이은 투쟁으로 7월 15일 민주노총 파업에 동참하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박근혜

혜의 정치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무능한 메르스 대응 때문에 박근혜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졌고, 당청 간 갈등이 공공연해졌다. 우리는 박근혜의 정치 위기를 기회 삼아 투쟁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대중 행동은 법원에도 무시할 수 없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결코 정치적 진공 속에서 재판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지금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보수 단체들은 빨리 법외노조 판결을 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다. 지난 1심에서 가처분 판결 직전에 단호하게 법외노조에 맞서 싸우겠다는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좋은 영향을 줬던 경험을 기억해야 한다.

또한 투쟁에 단호하게 나설 때 노동조합의 결속력도 단단해진다. 그래야만 노조 분리를 향하고 있는 듯한 전교조 내 일부 분리주의자들에 맞서 효과

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현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자 전교조 내 일부 활동가들이 ‘합법 교원노조’를 주장하는 ‘교육노동운동 재편모임’을 만들었다. 이들은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고사할 것이고, 설사 정권이 바뀐다고 해도 재합법화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합법적인 복수노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록 아직까지는 이들의 영향력이 작은 듯하지만, 전교조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분리 시도에 확실하게 대응해야 한다. 정치적 반박과 함께 조합원들을 결속시킬 대중 행동을 배치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지 말고 사전에 대중 투쟁을 배치해 사회적 지지여론을 형성해야 한다. 이런 행동들은 박근혜의 교육 부문에 대한 공격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는 성과급과 교원평가 문제도 악화시키려 한다

서지에 전교조 조합원

7월 1일 교육부는 기습적으로 ‘교원평가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어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시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8월에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 최종안을 발표하고, 12월에 관련 법령 제개정을 마무리해 2016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공청회는 바로 전날에 알려졌다. 당사자인 교사를 배제하고 형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비민주적인 자리였다.

무엇보다, 박근혜의 대선 공약이었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 근무성적평정(근평), 성과급평가(성과급) 일원화’라는 교원 구조조정의 칼날을 꺼내든 자리였다.

교사들을 아주 힘들게 하는 대표적 정책이 성과급과 교원평가다. 두 제도는 협력적이어야 할 학교를 반목과 갈등의 현장으로 바꾸어 놓았다. 줄 세우기를 통해 교사를 통제하고, 교사 간 경쟁을 유도하는 구실도 해 왔다.

정부는 교원평가제도를 “간소화”하고 “자율성”을 높였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성과급과 교원평가를 더욱 공고화하고 강제화하는 방안이다.

첫째, 근평과 개인성과급 평가를 교원업적평가로 통합한다. 근평은 승진 문제와 관련 있는데, 관리자(교장·교감) 평가와 교사 상호 평가가 있다. 근평을 개인성과급과 통합하면 관리자의 통제와 교사 간 경쟁과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교육부는 성과급 중 학교성과급을 폐지하겠다고 하지만, 그

만큼 개인성과급의 개인별 차등액이 더 커질 수 있다.

둘째, 박근혜의 대선 공약과는 달리 교원평가는 이번에 성과급과 통합되지 않았다. 다만 교육부 훈령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교원평가는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저 교원연수에 관한 규정의 일부 조항에 근거를 두고 시행해 왔다. 그래서 교사들이 교원평가를 거부할 여지가 있었다. 전교조도 교원평가 ‘참여 거부’가 방침이었다. 진보교육감들은 평가 방법을 서술형 평가 등으로 각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게 해 교원평가를 상당히 무력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교원평가에 시도별 자율항목을 넣겠다고 하지만, 훈령일지라도 평가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교원평가의 자율성은 위축되고 강제성은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근평, 성과급, 교원평가의 시기를 일원화하고, 교원평가의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교원평가를 성과급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의 말과는 달리 교원평가 결과가 성과급의 기준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만일 교원평가까지 교원업적평가와 연동된다면, 동료교사·학생·학부모 평가로 교사의 급여를 결정하는 ‘성과연봉체제’의 기초가 될 것이다.

전교조는 공청회에서 시위를 벌였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교원평가제 개악 시도는 박근혜 정권의 ‘직무성과연봉제 도입을 통한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정상

화’를 통해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등 임금체제를 개악하려 한다. 교원평가도 그 목적이 퇴출할 교사를 걸러내고 교사들을 통제하는 것이니만큼, 이번 개악은 교원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교사들은 공무원연금 개악으로 노후를 강탈당하고, 교원임용 축소와 교육재정 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다. 여기에 교원평가제도 개악으로 구조조정이 가시화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은 엄청날 것이다.

최근 멕시코 교사들은 정부의 교원능력평가 시험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 교사들의 노동조건은 교육의 질과 직결돼 있다. 경쟁으로 서열화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교육 공격에 맞서 단호하게 싸우자.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이충재의 노조 분리를 저지하라

박천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악에 멈추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한층 더 공격하려 한다. 특히 전 위원장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이 공무원노조에서 분리해 나가려는 상황을 이용하려 한다.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수용하는 배신을 저지르고는 이에 대한 반발이 일자 ‘합법노조’를 만들겠다고 노조를 탈퇴해 가칭 ‘통합 공무원노조’를 만들었다.

최근 공무원노조 중집은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기구”(이하 인사기구)에 참여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지만 박근혜 정부는 법외노조라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배제했다. 공무원연금을 개악할 때는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노조를 포함시켜 놓고선 말이다. 게다가 2013년에 공무원노조가 해고자를 조합원에서 제외하는 규약 개약까지 수용했는데도 박근혜 정부는 노조설립신고를 받아 주지 않았다. 정부가 이제 와서 법외노조 핑계를 대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다는 얘기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충재를 사퇴시켜 전열을 정비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지금 상태로 협상테이블에 앉혀 양보를 받아들이도록 하긴 어렵다고 여긴 듯하다. 이충재도 배제했는데, 이들의 규모가 작아 실익이 없다고 여겼을 것이다.



2010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 노조 분리는 박근혜가 가장 바라는 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분열을 부추기는 한편 법외노조 운운하며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투쟁성을 포기하도록 해 고분고분하게 만들려 한다. 그래서 민주노총 중집도 ‘합법노조’, ‘협상의 성과운운하며 분리한 이충재에게 “협상을 가장한 투항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공무원노조 내 일부에서는 조직 분리의 책임이 이충재 사퇴를 요구한 중집 성원과 공무원노조 내 투사들에게도 있다는 양비론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충재는 공무원연금 개악을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노동조합 민

주주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노조 분리를 획책해 왔다. 지금도 최대한 분리해 내려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온갖 왜곡과 악선동을 하고 있다. 이런 자를 공무원연금 개악에 반대해 싸워 온 투사들과 동급에 놓고 양비론을 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런 양비론으로는 진정한 단결을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쫓겨난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이충재와 그 지지자들에게 분리의 명분을 줄 뿐이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이충재의 분리 책동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동시에

민주노총과 연대해 임금피크제 도입 반대 등 노동조건 사수를 위해 어느 때보다 단결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노조 내 활동가들은 ‘분리 반대! 공무원노조로 단결’ 캠페인을 기층으로 확대시켜 노조를 결속시키고 투쟁을 건설하는 데서 주도적 구실을 해야 한다.

노동조건 공격에 맞선 투쟁을 준비할 때

다른 한편, 정부는 인사기구에 참여하겠다는 공무원노조를 내침으로써 노동자들의 저항 의지를 꺾고 양보를 강요하기 위해서만 ‘협의기구’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줬다. 결국 인사기구는 노동조건을 개선해 연금 삭감을 벌충해 주기는커녕 임금피크제 등 온갖 노동조건 공격 수단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는 임금피크제, 초과근무 부서별 총량제, 성과급 비중 확대와 성과급 균등 분배 제재, ‘능력’ 중심 승진제 확대, 임기제 등을 통한 비정규직 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그동안 공무원노조가 투쟁해 쟁취한 성과들을 빼앗아가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연금 지급 시기를 늦춰 놓고선 정년연장을 대가로 ‘임금피크제’를 들이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먼저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인데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을 공격 대상으로 지목했다.

인사혁신처는 정년연장 대신 “보수

총액은 변동이 없게 하는 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사실상 늘어난 정년은 ‘무보수’로 일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임금 총액을 삭감하려 한다. 공무원 노동자들은 낮은 기본급을 그동안 초과근무수당으로 벌충해 왔는데 이를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성과급을 늘리고 균등 분배도 제재하려 한다. 공무원노조는 직장협의회 시절부터 성과급 도입에 맞서 싸웠다. 도입 자체를 막지는 못했지만 조합원들에게 균등 분배하는 방식으로 무력화시켜 왔다. 인사혁신처는 균등 분배를 법적으로 제재하고 지급액도 확대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노동자들을 경정시켜 임금 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뿐 아니라 ‘성과’를 명분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효과를 낼 것이다.

여기에 능력, 성과 중심 승진제도도 확대하려고 한다. 성과 평가를 통한 승진제도는 실제로는 노동자들을 줄 세우기 해 통제 강화 수단으로만 활용돼 왔다. 공공서비스는 노동자들의 집단적 노동으로 제공되는 것인데 이를 개인별 성과로 평가하는 것은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그래서 공무원노조는 조건 없는 근속승진 도입을 위해 싸워 왔다.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런 공격을 전체 노동자에게 확대하려 한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 개악 이후 벌어지는 현장 간부들에 대한 탄압, 임금피크제, 수당 삭감, 성과급 공격 등에 맞서 민주노총과 연대해 강력한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2016년 최저임금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

생지현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넘겨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 측은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최저임금을 시급 1만 원, 월급 2백9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용자 측은 9년째 동결을 고집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의 생활 안정”(최저임금법 제1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최저임금(시급 5천5백 80원)으로는 “생활 안정”은커녕 미혼 노동자 1명의 생계비도 충당할 수 없다. 당연히 가족부양은 꿈도 꾸기 어렵다.

게다가 이마저도 못 받는 노동자가 지난해 기준으로 2백27만 명이나 된다. 노동자 8명 중 1명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 미달자는 57만 1천 명이나 늘었다. 심지어 공공행정 부문에서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가 13만 명이나 된다. 이 때문에 한국은 OECD에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둘째로 높다.

“아들이 치킨 사달라고 할 때마다 마음이 쿡 합니다. 그거 1만 2천 원밖에 안 하죠, 그런데 살기 팍팍하니까 그런



6월 27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최저임금 1만 원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돈도 아끼게 되는 거죠.”

“지금 버는 돈으로는 생활하기가 너무 빠듯합니다. 숨이 막혀요. 한 달에 몇 만 원이라도 저축하면서, 공과금 안 밀리면서 살고 싶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 위원들은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높다”고 앵무새처럼 되뇌고 있다. 사용자 위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해 1인 최저생계비가 61만 원이라는 근거를 들이대고 있다. 그런데 이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로 책정된 돈은 겨우 매월 10만 원이다. 대체 10만 원으로 어떻게 주거를

해결할 수 있단 말인가. “너희가 이 돈으로 살아 봐라” 하는 청소년노동자들의 말이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또, 사용자 측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사용자 위원들은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등 특정 업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다. 지불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는 업종 핑계를 대 최저임금을 깎자는 것이다.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임금의 하한선이다. 업종별로 임금이 차이가 나더라도 그것은 당연히 최저임금보다 높아야 한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지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에서조차 차별을 받아야 하나”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부터 최저임금 결정 단위로 시급과 함께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월급 병기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주휴수당(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가로 하는 것)을 잘 알리자는 취지다.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주휴수당을 떼먹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사용자 측은 이전 회의를 퇴장하고 불참하면서까지 월급 병기를 거세게 반대했다. 그러나 법조차 지키지 않으려고 떼 쓴다는 비난에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이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도 사용자 측과 한통속이다. 경제부총리 최경환은 “최저임금을 갑자기 너무 많이 올리면 전체 고용 총량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다”면서 사용자 측의 억지 주장을 편들었다. 그러나 OECD도 최저임금이 고용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을 이론적·실증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이후는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

석도 있다. 최저임금이 오르자 구직에 나서는 사람이 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는 6월 25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사측이 줄기차게 주장해 온 최저임금의 “지역별·업종별 결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초부터 최경환이 “가계 소득 확충”, “비정규직 처우 개선”, “최저임금 대폭 인상”하며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국 저임금 노동자들의 뒤통수마저 치겠다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걸고 투쟁을 조직해 왔다. 최저임금 1만 원은 4월 24일 파업의 주요 요구이기도 했다. 6월 16~27일에는 전국을 순회하며 최저임금 1만 원 요구를 알리는 “장그래대행진” 캠페인을 벌였다. 민주노총이 조직한 최저임금 1만 원 서명에는 18만 명이 동참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은 ‘가족이 있는 삶’, ‘문화가 있는 삶’, ‘빛지지 않는 삶’, ‘저축이 있는 삶’, ‘보급자리가 있는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4백만 명이 넘는 여성, 청년, 비정규직, 고령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의로운 요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결정해야 한다.

노동시장 구조 개악과 7·15 파업

투사들과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조직해야 한다

박설

최근 청와대 관계자는 노동시장 ‘개혁’의 다양한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한다.”

수출과 제조업 가동률 하락, 청년 실업 증대, 유럽·신흥국의 위기와 중국의 성장률 둔화 등 나라 안팎으로 경기 침체 심화를 가리키는 신호들이 줄을 잇자, 박근혜는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 이윤을 하라에 대처하려 한다. 그리고 내년 총선 때 인기 없는 공격을 감행해 표 떨어질까 봐 울며 서둘러 공격해야 한다고 여긴다. 최근 검찰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노동자 공격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정부는 일단 7~8월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필두로 통상임금 범위 제한, 노동시간 관련법 개악과 수당 삭감 등 임금 삭감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곧이어 비정규직 확대를 위한 법 개악 추진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는 정규직 “파보호” 해제로 비정규직·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논리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보여 준다. 정부가 내세운 임금피크제 시행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장 사례들을 봐도, 그 효과는 없거나 고작 저질 비정규직 일자리 늘리기뿐이었다.

사실 고령자 임금을 깎아 청년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책임 전가를 위한 변파용임 뿐이다. 기업주들에게 임금피크제는 인건비 절감 효과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최근 경총 부회장 김영배는 정부의 신규채용 주면에 불평한 심기를 드러내며 “기업들에 과도한 기대를 말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청년들을 이간질하는 이유는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을 고립·위축시켜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10대 그룹사 사내유보금이 1년 사이 40조 원이나 늘어 5백조 원 넘게 쌓여 있는 데도, 노동자들에게리 박락을 향해 경주하라는 것이다.

효과적인 단결을 위하여

따라서 정부의 이간질 책략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는 게 중요하다. 단결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좀 더 나은 처지의 노동자들이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위해 앞장서 싸워야 한다. 정규직 조직 노동자 운동이 협소한 부문적 시각으로 전체 노동계급을 상대로 한 정부의 공격에 대처하려다가는 오히려 난맥을 보기 십상이다.

이는 임금피크제-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을 대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다. 가령 호봉제이들이 단협으로 보장돼 있는 금속노조 지부·지회들은 취업규칙이 개악된다 해도 당장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정부의 가이드라인 공격에 맞서 투쟁하는 데 소극적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종국에 자신의 임금을 지키는 데서도, 전체 노동계급



6월 27일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1만원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서도 해롭다. 지난해 통상임금 투쟁에서 드러났듯이, 정부의 행정지침·가이드라인 등에 맞서지 않고 미조직·취약노조 사업장에 공격이 관철되는 것을 방지하면, 잘 조직된 노조도 압박을 받기가 더 용이해진다.

반대로 잘 조직된 노조들이 투쟁에 앞장설 때, '정년이 연장됐으니 임금 좀 줄어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노는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을 통한 임금 방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6월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 방안'에서 해고요건 완화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물 건너 갔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미 고용노동부는 고용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 조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전향배치,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단협 조항들을 문제 삼아 강제 시

이런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정부는 몇몇 사업장의 '조합원 가족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 “차별 해소” 같은 미사여구와 달리, 정부의 간섭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정부와 회사에 길들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부의 단협 시정 개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물론,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압박과 무관하게 자체적으로 노동자들의 단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조합원 가족 채용 특별 조항을 “투쟁의 성과”로 관철되는 것을 방지하면, 잘 조직된 노조도 압박을 받기가 더 용이해진다.

정규직 노조가 자기 자녀 특혜를 요구하면, 정규직 전환을 바라는 비정규직 동료들, 양질의 일자리를 원하는 청년들에게 상실감을 줄 수 있다. 이는 오해라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는 6월 17일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1차 추진 방안'에서 해고요건 완화는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고 관련 가이드라인이 물 건너 갔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이미 고용노동부는 고용 보호를 위한 단체협약 조항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전향배치,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단협 조항들을 문제 삼아 강제 시

이런 공격을 정당화하려고 정부는 몇몇 사업장의 '조합원 가족 우선·특별채용' 단협 조항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내세우는 “평등”, “차별 해소” 같은 미사여구와 달리, 정부의 간섭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고 정부와 회사에 길들이기 위함이다. 따라서 정부의 단협 시정 개입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척·가이드라인으로 추진한 데서 보듯, 예정대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국회 대응보다 저지 투쟁에 무게를 뉘어야 하는 이유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소속 노조들은 7월 15일 2차 총파업이 실질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으로 공격을 감행한다고 각자 입단협에서 대응하는 식으로 투쟁을 분산시켜서는 각개격파 당할 수 있다.

그런데 파업을 벌일 힘과 조직이 있는 금속노조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쟁의권 확보 사업장'만을 그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유감이다. 올 초 금속노조 대의원대회가 가이드라인에 맞선 파업 방침을 정했을 때, 그것은 합법적 쟁의권 여부와는 상관없는 결정이었다.

이런 금속노조 중립 결정은 쟁의권이 없는 현대·기아차 등 대형 노조들이 파업을 비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준 것이다. 이경훈 현대차지부 집행부는 7월 15일에 입단투 출정식을 잡아

4·24 파업에 이어 또다시 민주노총의 파업 방침을 거부하려 하는데, 이에 변죄부를 준 것이다. 물론 지금 현장 분위기가 4·24 파업 때 같지만은 않은 것은 사실이다. 4·24 파업 이후 공무원연금 개악 등 전체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칠 주요 전선에서 일부 노조 지도자들의 배신적

타협이 잇따랐고, 민주노총 집행부가 이에 동요하면서 실망감이 생기고 활력이 줄어들었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활동가들은 현실의 어려움에 체념하지 말고, 정부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은 메르스 사태로 20퍼센트대로 떨어졌다. 정부·여당의 내분은 막장으로 치닫고 있다. ▶관련기사 4편

최근 갑을오토택 노동자들이 전직 경찰·특전사 출신의 노조 파괴 용병들을 쫓아내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이런 박근혜 정부의 위기 속에서 파업을 벌이며 사측을 압박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민주노조 운동의 오른팔 격인 현대·기아차지부 집행부는 금속노조의 결정에 안도하지 말고, 민주노총 지침에 따라 7·15 파업 지침을 내려야 한다. 정부의 법외노조화 시도에 맞서고 있는 전교조가 7월 15일에 맞춰 조퇴 투쟁 등을 벌이며 민주노총과 함께 싸우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다. 정부 공격의 최전선에 있는 공공운수노조도 7·15 파업에 적극 나서야 한다.

활동가들은 자기가 속한 산별·노조가 파업 조직에 나설 수 있도록 진지하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향후 계속될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의 소중한 밑거름을 쌓는 길이기도 하다.

공공서비스 공격, 노동조건 하향평준화

공공부문 공격을 저지하라

강동훈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공격과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다시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6월 17일 '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에 이어, 6월 25일에는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정부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의 주요 정책인 임금피크제를 공공부문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로 강제해, 올해 안에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조선·자동차·금융·제약·도매·산업 등 효과가 큰 민간 업종으로 임금피크제를 확대해 가겠다고 밝혔다. 30대 대기업도 특별 관리하겠다고 한다.

또, 임금피크제 도입 후 성과 중심 운영을 강화한다며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에 따른 퇴출제도 공공기관부터 적극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2016년부터 정년이 연장되는 것에 맞춰 고령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깎는 것이다. 이렇게 마련한 돈으로 2016~17년에 공공기관에 처 청년 6천7백 명을 추가로 채용하겠

다고 한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를 청년 고용 확대 방안이라고 주장한다. 나이 많은 정규직이 좋은 일자리를 독점하고 있어서 청년 실업이 늘어나는 것이므로, 고령의 노동자들이 임금 일부를 양보해야만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선

그러나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극구 막아 온 정부가 청년 고용을 격정하는 양 말하는 것은 완전한 위선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는 인력 감축을 공공기관 경영 평가의 주요 지표로 삼아 왔다. 이명박 정부 때는 공공기관 직원을 2만 6천 명이나 줄였다. 또, 총액인건비제* 등으로 정규직 인력 확충을 철저히 막아 왔기 때문에 공공기관들은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해 왔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30대 공공기업에서 비정규직은 4만 명에서 4만 5천 명으로 5천 명(12.4퍼센트)이나 늘어난 반면, 정규직은 9만 7천5백 명에서 9만 8천6백 명으로 1천1백여 명(1.2퍼센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CEO스코어 조사)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이정원

공공부문 양대노총 공대위가 6월 24일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전환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정상화' 저지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노조들은 개별 교섭을 전면 거부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8월 경고 파업, 10~11월 총파업 투쟁 조직을 결의했다.

임금피크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공투본은 정부가 청년 고용을 해결하려면 총액인건비를 증액하고 각 공공기관 직원을 확대하라고 울게 요구했다. 그런데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는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투본은 '총액인건비를 증액하지 않는 한 단위노조는 일체의 임금피크제 교섭을 거부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이에 기층 활동가들은 '총액인건비가 늘면 합의할 수 있다는 의미'나"고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의 한 간부는 인건비 삭감 등 불이익 때문에 "고민이 된다"고 말했다.

더구나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6월 24일 열린 공투본 주최 토론회에서 고령자 임금은 삭감하되 노동시간도 함께 줄이는(노동시간 피크제) 양보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날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도 "임금 수준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축소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양보안을 비판하지 않는 것은 우려를 키우고 있

한국의 공공부문 고용 비중은 다른 나라에 견주 매우 낮다. 2010년 기준 으로 인구 1천 명 당 공공부문 종사자(OECD 평균이 83.1명인데 우리 나라는 32.3명으로, OECD 평균의 절반도 안 된다.

정부가 공공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강화하는 정책을 펴야 할 판에,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 삭감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 터진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로 공공 의료와 안전에 대한 정부 투자가 더욱 늘어야 한다는 점이 밝히 드러났다. 이때 늘어나는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청년 고용의 대안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민영화와 공공서비스 축소

그런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공공부문 '개혁' 방안에는 오히려 민영화와 재정 지출 억제 정책만 담겨 있다.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할 텐데, 이렇게 되면 급 지출을 제한하는 정책들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서비스를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2차 정상화 방안으로 이미 발표한 공항철도 매각과 신규 철도노선 운영권 매각, 철도 사업부제 도입, 고속도로 건설과 도로 유지 보수 업무 사기업 이양 등은 그 자체로 민영화다. LH공사의 주택 분양 축소는 LH공사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우체국 예금·보험 부분의 외부 평가 실시도 우체국 민영화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 축소, 재정 지출 삭감과 한 세트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이 청년 고용 대책이라며 노동자 사이를 이간질하려 하지만, 부모 세대 노동자의 것을 뺏아 자식 세대에 주는 것은 전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만 악화시킬 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도입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등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할 텐데, 이렇게 되면 특히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기업주들의 공격에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직 일자리 확대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지는 제안을 내놔다. 이는 공투본 요구로 채택됐다.

그런데 경영평가 성과급 양보는 정부의 프레임에 맞설 현명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우선 이런 주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결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이 희생해야 한다는 정부의 논리에 이용될 수 있다. 그러면 좋은 의도에서 노동자들이 양보를 제의해도 박근혜 정부는 이를 악용해 정규직 책임론을 부추기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할 것이다.

둘째, 경영평가 성과급을 청년 채용투자로 내놓자는 제안은 임금을 자진 삭감하자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는다.

공공운수노조도 지적하듯, 경영평가 성과급은 10여 년간 공공기관 '임금인상' 억제되어 온 대신 지급한 것이다. 그래서 공공기관 30곳을 살펴보면, 경영평가 성과급은 연간 임금 총액의 5~14퍼센트에 이른다.

노동자들이 스스로 임금 삭감을 포함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열의 있게 나설 리 없다. 그러면 정부의 공격을 저지할 진정한 힘을 결집하기 어려워질 것이다.

셋째, 양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노조가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면 시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는 있다고 말한다. 물론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필수 공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숙수무책으로 당하기 쉽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 투쟁은 전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지키는 투쟁이다. 게다가 공공부문의 노동조건은 질 좋고 안전한 공공서비스와 뗄 수 없는 관계이므로, 노동조건을 지키려 하는 것은 결코 편협하거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단호하게 투쟁에 나설 때 정부의 '철갑불' 비난에 맞서 진정한 효과적으로 지지를 모을 수 있다.

이처럼 박근혜 정부는 공공서비스 축소, 재정 지출 삭감과 한 세트로, 임금피크제·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하향 평준화하려 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2단계 '정상화' 공격에 효과적으로 맞서려면

투지를 약화시키는 양보 운운 중단해야

만 퍼붓지 말고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부는 임금도 일방적으로 정하고 심지어 개별 노조 단협 사항까지 일일이 간섭할 정도로 지독하게 군다.

그러나 정부가 공격을 밀어붙이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대정부 교섭을 중상에 두는 대응은 오히려 약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사정위를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밀어붙이는 수단으로만 사용했고, 얼마 전 공무원연금 개악도 '대타협 기구'와 '실무기구' 논의를 통해 밀어붙였다.

물론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는 정부가 노정교섭에 응하리라고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개별 노조들이 정부의 압박에 버틸 명분용이라는 해석도 있다. 그러나 노조들이 이런 압박에 버티게 하려면 정부와의 대화라는, 노동자들이 보기에도 별 가망성 없어 보이는 명분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는 이미 지난해 1차 '정상화' 반대 투쟁 때 잘 드러났다.

따라서 공투본은 양보론과 정부와의 공동 교섭을 중심으로 연대하기보다는 투쟁의 구심점이 돼야 한다.

8월까지 임금피크제 도입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계획에 맞서려면 7~8월에 힘을 집중해 투쟁해야 한다. 민주노총 7월 15일 '총파업'에 공공운수노조가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반갑게도 최근 부산지하철노조가 90.2퍼센트 지지로 7월 15일부터 3일간 파업을 가결했다. 이런 투쟁을 더 확대시켜야 한다.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PAY-GO(페이고)

'Pay as you go(반만큼 쓴다)'를 줄인 말로, 새로 지출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삭감하거나 수입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입법화되도록 의무화하는 것.

총액인건비제

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내에서 정원, 보수 등을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제도, 총인건비만 정해져 있으므로 정원을 늘리려면 임금을 삭감해야 한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청구 서명 성사

서부청사 기공식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으로 재개원하라

김재현

메르스 사태로 32명이 목숨을 잃었다. 단순한 질병으로 그칠 수 있는 메르스가 왜 재난 사태로 까지 가게 됐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그러면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감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 홍준표는 공공의료 확대 열망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 진주의료원 폐원의 마지막 쐐기를 박으려고,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남도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홍준표는 메르스로 인한 국민적 관심을 피하고자 6월 16일로 예정된 기공식을 연기했다. 그런데 메르스가 진정되는 듯 하자 곧바로 강행하는 것이다. 최근 보건의료노조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진주의료원에 메르스 대응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이 있었다는 사실을 지적하자, 궁지에 몰린 홍준표는 음압병상이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그런데 정작 공동 공개 현장검증을 진행하자는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의 요청을 묵살하고 있다. 홍준표는 기공식을 서둘러 현장검증 자체를 무산시키려 하는 듯하다.

진주의료원이 있었다면 메르스 사태 해결에 당연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예컨대 사천의 메르스 의심 환자가 가까운 진주의료원을 놔두고 1백20킬로미터나 떨어진 양산 부산대병원까지 가서 입원해야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고무적이게도 운동본부가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를 위해 진행한 서명이 경남 유권자의 20분의 1인 13만 3천8백26명을 넘어 주민투표 청구 요건을 충족했다. 메르스 사태를 경험한 경남도민의 진주의료원 재개원 열망이 높다는 점을 보여 주는 결과이다.

불과 6년 전 5백34억 원을 들여 신축한 진주의료원을 돈이 없다고 폐원하고서는, 다시 1백61억 원을 들여 서부청사로 리모델링하는 것은 수백억원의 세금 낭비이자 범죄 행위이다.

보건의료노조와 운동본부는 홍준표의 서부청사 공사 강행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바라는 모든 이들은 이 투쟁을 지지하자. 홍준표는 서부청사 리모델링을 중단하고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해야 한다.



노동당 당대회 이후

좌파 정당으로 남는 것이

김문성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진보결집파가 내놓은 당원총투표 안건이 부결됐다. 이 안에 재석 대의원 2백86명 중 1백18명(41퍼센트)이 찬성했다.

이로써 국민모임, 노동당, 노동·정치·연대, 정의당 등 4자 대표의 “공동선언에 기초하여 새로운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이 주춤하게 됐다.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은 노동당 대의원들에게 진보 재결집 정당이 현재의 정의당보다 더 왼쪽의 정당으로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관련 기사 : 151호 온라인 ‘노동당 당대회에 부쳐 —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정의당과 통합하는 것은 오른쪽으로의 이동이다’

노동당 자체의 정치 노선은 주류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정의당보다 왼쪽에 있는 좌파적 개혁주의라 할 수 있다. ‘통합 대 독자’ 갈등이 오른쪽으로 향하는 통합 움직임에 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물론 가장 중대한 문제인 당의 통합 문제를 다루는 것이므로 일반으로 당원 전체의 토론과 총투표로 결정하는 것이 더 폭넓은 의견 수렴 방식일 것이다.

그러나 나경재 대표 등이 내놓은 총투표 안은 당원들에게 통합 여부의 결정권을 주는 안이 아니었다.(결정권은 당대회에 있었다.) 이미 “대중적 진보정당 건설 추진”에 대표자간 합의까지 한 마당이었다.

따라서 우경적 통합 결정을 위해 당대회를 무력화하려고 총투표를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반대파의 의심을 풀 수 없었다. 결집파 지지 대의원들의 일부도 총투표 안건의 취지를 이해하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4자 통합보다 좌파적 정당으로서 투쟁 건설에 초점을 둔 총투표 반대 발



노동당 2015 정기 당대회에서 4자 통합을 위한 안건이 부결됐다. 그러나 노동당 내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언이 더 지지를 얻었던 이유다.

이런 불신에는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정의당 천호선 대표가 한 언론 인터뷰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천호선 대표는 “통합 신당은 두 자릿수 지지율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이렇게 진보정당이 기반을 다진 후 … 2017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야당 연합 … 정권교체 후에는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4자 통합에 반대하는 쪽이 경계해 온 우경 노선이다.

천호선 대표를 당대회에 초청한 나경재 대표 등 결집파 지도자들은 이날 자신들을 더 곤혹스럽게 한 천대표의 인터뷰 내용을 누구도 나서서 비판하지 않았다.

4자 통합은 우경화

어쩌면 천 대표의 인터뷰는 노동당 내 좌파를 4자 통합 주도자들이 반기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치 2011년 진보대통합 논의 때 진보신당 좌파들의 합류를 꺼린 옛 민주노동당 당권파가 9월 진보신당 당대회를 앞두고 자극적인

발언을 쏟아낸 일을 떠올리게 한다.

심상정 전 정의당 원내대표는 천호선과 대조적으로 노동당 당대회를 앞두고 함께하자며 옛 진보신당 대의원들에게 공개 사과를 했다(〈레디앙〉, 6.24). 그럼에도 독일 사민당의 고데스부르크 강령(실천은 물론이고 말에서조차 자본주의 변혁과 계급투쟁을 포기하고 반공주의를 표방한 강령)을 새 ‘이정표’로 내세워 급진좌파 정당인 노동당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걸 잊지 않았다. 천호선, 심상정 두 지도자는 이미 ‘헌법 내 진보론’이나 ‘튼튼한 안보’론으로 좌파와 선을 그은 바 있다.

따라서 급진좌파의 일부인 노동당이 앞으로 우경화하지 않는 한, 4자 통합에 참여할 명분은 갈수록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당 내부에서 제동이 걸린 당대회 결과 때문에 진보 재결집 운동의 주도권은 지금보다 더 정의당 지도부에 쏠릴 것이다. 그래서 노동당 분열 위기는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이 글을 쓴 직후, 예상대로 통합을 추진했던 나경재 대표와 권태훈·김윤희 부대표

가 사퇴했다.)

다급해진 나머지, 노동·정치·연대와 연계된 민주노총의 중앙파·국민파 지도자들이 통합 정당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경화한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의당과의 통합 때문에 좌파 정당인 노동당이 분열하는 것은 (선거적 성과는 거들지 몰라도) 노동계급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미 2012년, 통합진보당이 총선에서 역대 최고 성과를 거뒀지만,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강요한 정치적 분화 탓에 다시금 분열로 이어진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지금은 좌파가 반자본주의·반제국주의 정치를 날카롭게 버리며 기층에서 투쟁 건설에 기여하면서 아래로부터의 노동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노동당도 우경적 4자 통합에 합류하기보다 ‘운동 정당’으로 남아 노동자 투쟁, 각종 삭감, 세월호 등 여러 쟁점에서 공동전선 방식으로 단결을 추구하는 게 전체 노동운동에 이로울 것이다.

노동당 당대회 유감 : 국민연금하나로 특별결의문 채택

6월 28일 노동당 당대회는 국민연금하나로 계획을 담은 특별결의문을 표결로 채택했다. 이는 좌파 정당, 운동정당을 표방해 온 것과는 모순되는 결정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운동은 공무원연금을 노동자들의 정당한 후불 임금인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 기원만을 따져,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 대가로 받는 “떡고물”로 취급해 왔다. 그러니 그들의 연금 통합 발상은 상향평준화가 아니라 노후 연금 차등을 없앤다는 명분 아래서 하향평준화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특별결의문에서는 공

무원노조 등의 비판을 염두에 둔 듯, ‘국민연금으로 통합 후 공무원들에게는 더 내는 만큼 더 받을 수 있게 하는 부가연금 지급’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모순이다. 국민연금하나로 쪽은 공무원연금의 문제점으로 소득비례성을 꼽아 왔기 때문이다. 이것을 없애자고 연금 통합을 하면서 소득비례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는 이 프로젝트를 얼마나 무원칙한 것인지 보여 준다.

사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희뿌연 태도 때문에 지난 몇 달간 노동당 등 좌파 상당수가 공무원연금 개

악 저지 투쟁을 적극 옹호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무원연금은 크게 개악됐다. 이 투쟁은 긴축과 내핍 강요를 위한 전조전이었는데 맥없이 진 것이다. 공무원연금 수익비는 국민연금보다 악화됐다. 그러니 이제 와서 ‘부가연금’ 운운하는 것은 무원칙에 더해 부정직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노동당이 당대회에서 사실상 박근혜의 공무원연금 개악을 전제로 한 국민연금하나로 같은 사회연대전략 파생 프로젝트를 채택한 것은 좌파답지 않은 결정이다.

사회연대전략은 세금과 복지를 매개로 ‘계급’과 ‘국민’을 조화시키려는

개혁주의 프로젝트의 주요한 기둥이다.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계급이 내는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가 ‘사회연대(계급 협력)전략’이 되는 것이다. 이런 전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협약을 실행하려면 대표성 있는 노조, 개혁주의 정권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사회연대전략이 경제투쟁을 억제해 ‘정치’투쟁에 종속시키려는 이유다.

이 점에서, 유럽식 노사정 대타협 모델에 대해 비판적인 옛 사회당 경향이 사회연대전략적 정책에 반대하지 않은 것도 모순된 일이다.(과거 사회당은 사회연대전략에 반대했었다.)

노동자 투쟁에 더 낫다

좌파 개혁주의의 위기와 모순

진보재결집을 둘러싼 노동당 논쟁은 노동당 당세 약화가 그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과 사회당 합당 이후로만 따져도 당권자가 2천 명 넘게 줄었다. 20~30대 청년 당원들이 그 상당수를 차지한다. 당권자 감소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어려워졌다.

권태훈 부대표 등은 이것이 진보의 분립·분열로 말미암은 위기의 일부라고 진단한다. 진보 재결집론은 이런 위기의 돌파구로 제안된 것이다.

그러나 좌파가 더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려면, 노동자 투쟁 수준이 전반적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 돌아보면, 옛 민주노동당의 등장과 성공의 배경에는 1997년 연초 민주노총 파업과 그 해 말 경제공황의 후폭풍에 맞서는 만만찮은 투쟁들이 있었다. 그리스 시리자와 스페인 포데모스의 성장도 마찬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노동계급 투쟁만이 이 사회의 지배자들인 자본가들의 이윤에 주된 위협을 가할 수 있다. 노동자들은 경제투쟁일지라도 이윤 창출을 멈추는 투쟁에 참여해 노동 '계급'으로서 힘과 연대를 자각할 때 의식과 자신감을 높일 수 있다.

역사적으로 이런 배경에서 각종 정치·사회 운동들이 활성화되곤 했다. 수동적으로 사회 상층부가 제공하는 개혁을 선물 받는 것은 계급의 정치의식 향상과 별 연관이 없다.

요컨대, 핵심 과제는 계급투쟁을 활성화하는 데 좌파가 기여할 수 있느냐다.

경제와 지정학의 위기 시대에 계급간 양극화는 노동운동 안에서도 좌우 정치 양극화를 낳는다. 개혁주의는 체제의 변형을 전제로 개혁을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므로 체제의 위기 때는 개혁주의 운동 자체가 지배계급을 도와야 한다는 압력과 기층의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는 위기를 겪다가 좌우로 분열하곤 한다.

최근 유럽에서 주류 개혁주의가 심각한 배신을 저지르며 우경화한 것, 이를 비판하며 좌파 개혁주의가 부상하는 것이 그 사례다. 또, 10여년 만에 민주노총에 좌파 지도부가 등장한 것이나, 4·24 총파업 직후에 노동운동의 우파 지도자들이 연이어 배신 행위들을 저지른 것도 이런 운동 내 좌우 양극화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좌파 개혁주의는 기층의 전투적 압력을 더 많이 수용하는 개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좌파 개혁주의가 좋은 구실을 하기도 하지만, 그 역시 일관되지 않고 기층의 압력 변동에 따라 동요한다는 뜻이다. 한편에선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하고 우경적 4자 통합을 지지하기도 하지만 지역 연대, 세월호, 최저임금 등에서 기여를 하기도 한다.

그래서 전국적 계급 세력균형이 바뀌



지금 같은 위기의 시대에는 좌파가 아래로부터의 노동운동을 고무하는 일이 중요하다.

려면 기층의 전투성이 노동운동 상층의 보수성에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결국 좌파의 좌파인 급진 좌파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 노동계급이 사회 전체에 그래야 하듯이 급진 좌파도 자신의 세력과 유용성을 노동계급 대중에게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2013년 초에 보건노조, 그해 중반에는 전교조, 그해 말에는 철도노조가 전체 운동에 부양력을 제공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 10여년 만에 좌파 지도부가 조합원 직선으로 당선한 것이나, 이 집행부가 총파업을 조직하겠다고 했을 때 기대와 지지를 많이 받은 것도 방증이 될 수 있다.

포섭된 노동?

그러나 이런 조직 노동운동의 힘을 고무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당의 좌파 개혁주의의 정치는 약점을 보여 왔다. 노동당은 주로 민주노총으로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을 “포섭된 노동”(옛 진보신당)이라고 평가절하하고, “불안정 노동”(옛 사회당)을 새로운 주체로 부각시켰다. 특히, 경제투쟁(주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둘러싼 단위 작업장별 투쟁)을 ‘집단 이기주의’라며 폄하해 왔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좌파 지도부의 등장을 기층 투쟁 활성화에 이용하는 것에도 별 의욕을 안 보였다. 투쟁의 선봉에 서야 할 조직 노동계급의 노동조건 방어에도 뜻뜻미지근했다.

일부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노동운동보다 급진적 사회운동을 더 가치 있게 보기도 한다. 이는 장점도 있지만 약점이 더 크다. 생산 현장에 기반한 노동운동과 유리된 사회운동은 사회적 뿌리가 얇다는 바로 그 점 때문에 대체로 급속히 떠올랐다가 급속히 가라앉곤 한다. 그러면 일부는 우경화해 노골적인 사회연대전략(국민연금하나로) 같은 포퓰리즘으로 가기도 한다.

요컨대,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요구하면서도 그 급진화에 꼭 필요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흔히 취하는 투쟁 형태(경제투쟁)에는 거리를 두는 모순이 노동당 정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약점 때문에 노동운동 안에 더 넓게 뿌리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현재 정치화 수준과 더불어 당세 위기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4·24 총파업 지지 논평에서 파업 요구의 하나인 공무원연금 개악 문제는 언급도 하지 않았다. 노동당 공식 논평에서 박근혜의 ‘공공부문 정상화’에 대한 폭로나 반대를 보기 힘들었다. 공공부문은 대표적인 ‘정규직 고임금 직장’으로 찍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 전통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중요 의제로 삼아 온 노동당이 현대차·기아차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 투쟁과 그 쟁점에 무관심한 것도 같은 맥락인 듯하다. 이 투쟁들

노동운동의 급진화를 요구하면서도 그 급진화에 꼭 필요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이 흔히 취하는 투쟁 형태에는 거리를 두는 모순이 노동당 정치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은 공장 안 모든 노동자를 위한 투쟁이며, 각 부품업체 노동자들에게도 큰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다. 실제로 현대차 현장 투사들과 조합원들은 2013년 봄 비공인 파업을 벌이며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또한 이 노동자 부분들은 모두 지배자들이 노동계급 전체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기 위해 제압해야 할 중요한 고지로 보는 부분들이다. 좌파가 이 노동자들의 투쟁을 외면해서는 다른 투쟁에도 도움되기 어려운 까닭이다. 노동자 투쟁이 아니어도 말이다. 예를 들어, 민주노총 4월 총파업이 정말로 성공적이었다면, 세월호 투쟁에도 힘이 됐을 것이다.

공상적 사회주의

정규직 노동조합의 경제투쟁의 중요성을 무시하며 열악한 비정규직 투쟁이어야만 더 급진적이라는 식으로 보는 것은 장점보다 약점이 많다. 이것은 과학적 전략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도덕주의, 즉 이성과 선한 의지를 앞세워 사회 구성원의 조화와 설득을 추구한 공상적 사회주의(특히, 1858년의 ‘참 사회주의’)처럼 보인다. 어찌면 이런 정치는 전략, 계급투쟁 등을 경시하는 2000년대 초·중반 자율주의 정치의 유산일 수도 있다.

이런 도덕주의는 노동운동의 약점을 노동자 대중의 현재 의식 수준에서 찾는 데서 주로 비롯하는데, 이런 이데올로기주의적 접근법으로는 ‘이기적인’ 경제투쟁보다는 이데올로기 투쟁(교육과 선전, 선거)을 더 중시하게 된다.

또한 정규직이나 기존의 조직 노동자들의 의식을 낮춰 보는 외관상의 급진성은 실제로는 기회주의를 낳기도 한다. 상층 지도자들의 투쟁 회피주의(관료주의)와 대중의 후진적 의식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노동운동을 이데올로기주의의 잣대로 바라보면, 노동운동 안에서 상층과 기층의 이해관계가 꽤 다른 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계급간 중재자를 추구하는 노동운

동의 상층 개혁주의 지도층의 입맛에 딱 맞는 사회연대전략(국민연금하나로, 건강보험하나로, 보편증세론 등)을 옛 진보신당 출신 지도자들 일부가 지지하고 사회당 계열이 분명하게 반대하지 않은 것도 그 사례다.(사회당은 과거에 사회연대전략을 비판했다.)

결국 노동당 정치의 수동적 급진성도 경제 침체기 당의 어려움을 가중시켰을 것이다.

수동적 급진성에는 물론 노동당의 다양한 정치적 구성도 한몫했을 것이다. 옛 진보신당 지도부는 무지개연합식의 진보 재구성성을 표방해 왔다. 그러나 다양성의 공존은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로 반드시 진보적 구실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에서는 자율주의 관성이, 한편에서는 이른바 ‘당적 질서’가 작동한다. 그 결과, 이질적 구성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일종의 정치적 “늪”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노동당 내 논쟁은 민주적 토론을 통한 결정과 상호 승복보다는 종종 상호 불신 속에서 징계로 해결되곤 한다. 2012년 대선에서 김순자 후보 지지 당원이 제명된 것이나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진보당·노동당의 단일후보가 된 김종철 전 부대표가 징계를 받은 것이 그 사례다.

반제국주의

끝으로, 노동당의 좌파 개혁주의가 제국주의 문제에 큰 의욕이 없는 것도 특별히 지적할 문제다. 최근 강상구 대변인은 <레디앙> 기고에서 이렇게 반성한다.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문제 [에서] … 진보정당은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주요 행위자가 되어 본 적이 없고, 그럴 만한 행위자들을 조직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그는 북한의 핵무장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의 일차 원인인 듯이 주장하고(미·중간 제국주의 갈등이 더 선차적 원인이다), 따라서 그 해법도 비핵선언과 남북 적대 청산으로 “한미동맹의 근거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자고 주장한다.

이런 공상적 개혁주의의 관점으로는 박근혜 정부와 한미동맹에 일관되게 맞설 수가 없다. 사회당 경향도 제국주의 문제에서는 더 나은 것이 없어 보인다. 여기서도 도덕주의와 평화주의가 현존 제국주의 질서에 대한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이해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와 전략이 부실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제국주의 간 갈등 속에서 좌파는 끊임없이 진영 논리 그리고/또는 자국 지배계급 지지 압력 사이에서 동요하며 길을 잃을 수 있다.



사진 출처: Sebastian Berhard

유럽연합은 제국주의적 경쟁과 착취를 위해 조직된 자본가들의 기구일 뿐이다.

천대받는 사람들의 해방을 원한다면

유럽연합을 반대하라

영국에서 유럽연합을 두고 논란이 거세다. 이에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의 편집자 주디스 오어가 유럽 연합에 지지 투표를 하는 것은 노동자, 이민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안의 말은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자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첨가한 것이다.

영국은 유럽연합에 남아 있어야 할까? 이 주제는 앞으로 여러 달에 걸쳐 큰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보수당 소속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은 이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유럽연합에 대한 의견을 두고 보수당 내부에서는 당 분열까지 치달을 수도 있는 위기가 시작됐다. 캐머런과 자본가 계급 다수파는 영국이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한다. 그들은 찬성표를 호소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주요 정당과 심지어 노동조합들까지도 이를 지지한다.

그러나 〈소셜리스트 워커〉는 사회주의자들이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럽연합은 언제나 자본가들의 기구였고, 지금도 그렇다.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설사 지금 가장 강력하게 탈퇴 투표를 주장하는 쪽이 나이젤 패라지와 그가 속한 극우정당인 영국독립당(Ukip), 그리고 보수당 우파이더라도, [유럽연합이 자본가들의 기구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유럽연합을 일 자리를 창출하고 악랄한 자본가들로부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좋은 기구로 여긴다. 또 어떤 이들은 유럽연합이 일과 학업을 위한 국가 간 이동을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유럽연합에 남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런 생각은 상식적이고 진보적인 선택인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유럽연합을 탈퇴해야 한다

고 대중을 납득시키기는 힘들겠지만, 우리는 국제주의와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

영국독립당의 패라지든 보수당의 캐머런이든 노동자와 이민자의 아군이 될 수 없다.

캐머런은 다문화주의 반대론을 주도했다. 그는 앞장서서 이민자들을 악마화했다. 노동당도 이민자 통제 공약을 내세우며 별다른 것 없는 모습을 보였다.

주류 정당들은 이민자 희생양 삼기 [책임 전가]를 주도했다. 그들의 인종차별적 연사와 정책들은 영국독립당의 성장을 부추겼다. 그래서 1975년 국민투표 때 〈소셜리스트 워커〉는 자본가들의 기구인 유럽경제공동체(유럽연합의 전신)에 영국이 잔류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분석이 지금은 바뀌었는가? 답은 '아니오'이다.

캐머런과 그의 동료들은 영국 자본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유럽연합에 남기를 원한다. 자본가들의 기구인 영국 산업연맹은 “유럽연합에 남는 것이 기업에게는 최상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은 국민 대중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고 결성된 자비로운 국가 연합이 아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이민자나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한 적이 없었다.

유럽연합은 1950년대에 자본의 지역 블록을 형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유럽연합은 회원국들이 세계 무대에서 경쟁하고 군사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도왔다. 유럽연합에 가입하려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기구는 나토가 확장하고 세력을 얻고 전쟁을 벌이는 데 필수 요소가 됐다.

은행 파산으로 그리스의 노동자와 빈민이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유럽연합의 주장은 그들의 계획이 무자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광범하게 퍼져 있는 인식과는 달리 유럽연합은 이민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지 않는다. 그들은 유럽연합의 경계 밖에서 들어오려는 모든 이민자들을 공동으로 차단한다.

지난 1975년의 유럽경제공동체 잔류 국민투표 당시에는 노동당이 집권하고 있었고, 투표는 지금과는 매우 다른 상황에서 치러졌다.

보수당의 다수파는 찬성 쪽을 지지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더는 제국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미국과 동맹을 맺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국민 국가와 힘을 합쳐 영국 자본주의를 강화해야 했다. 그들은 국경 밖의 자유 시장을 원했고, 유럽연합은 당시에 “시장 공동체”였다. 그들은 또한 영국 노동자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깎아내릴 수 있는 장치가 필요했다.

당시 토니 벤이나 마이클 풋 같은 노동당의 주요 좌파 하원의원들은 탈퇴 투표를 독려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과 스코틀랜드 민족당, 웨일스 민족당, 공산당도 탈퇴 운동을 펼쳤다.

좌파의 다수는 국제 연대의 관점이 아니라 확고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탈퇴를 지지했다.

그럼에도 좌파적 개혁주의자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주장한 덕분에 사회주의자들은 좌파에 기반한 광범한 탈퇴 운동을 건설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의 본질을 폭로하는 것도 지금보다는 쉬웠다.

그러나 1970년대에도 이것이 간단하지는 않았다. 비열한 우파 인종차별주의자[이자 보수당 국회의원] 이녹 파울 같은 자들도 나치 정당인 국민 전선과 마찬가지로 유럽연합 탈퇴 운동을 벌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탈퇴 운동에서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우파들은 단순히 탈퇴 지지에 그치지 않는다.

영국독립당은 5월 7일 총선에서 3백8십만 표를 얻었다. 그들이 이렇게 약진했음에도 하원에서 1석밖에 얻지 못했지만, 덕분에 그들은 유럽연합에 대한 논의를 주도하고 장악할 수 있게 됐다. 이제 패라지와 영국독립당은 역겨운 인종차별주의적 반(反)이민자 운

동을 벌일 것이다.

반면에 노동당 좌파는 취약한 상태이다. 풋이나 벤에 비견할 만큼 인지도 높고 유럽연합 탈퇴 운동을 주도할 만한 인물이 없다.

노동당 소속의 독불장군 하원의원인 케이트 호이가 당 내에서 탈퇴 운동을 이끌고 있을 뿐이다.

패배

모든 대규모 노동조합들도 유럽연합에 남는 것을 지지한다. 대처 정부 때의 패배로 일부 조합원들은 투쟁이 아니라 유럽연합이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기구라고 생각하게 됐다.

유나이트[UNITE: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조직된 최대 일반노조] 노조의 사무총장 렌 맥클러스키는 조합원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 참가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이렇게 주장했다. “유럽연합은 당신이 착취를 당하지 않고 직장에서 보호를 받으며 법정 휴가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유럽연합은 영국의 일자리 3백5십만 개와 관련이 있고 영국 경제에 3백억 파운드를 가져다 준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은 영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다. 당신에게도 좋다.”

심지어 노동조합이나 좌파에서 유럽연합 반대 주장을 하는 일부 사람들조차 이민자 수가 통제되어야 한다거나 이민자가 문제라는 생각에 발미를 주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자본가의 도구인 유럽연합에 반대하자고만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다. 사회주의자들은 영국독립당이나 다른 모든 우파적 탈퇴 운동가들과 절대로 신념을 공유하거나 함께 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야 한다.

우리는 “주권”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거부한다. 영국이 유럽연합에 소속되든 아니든, 영국 노동자들은 영국 국가를 통제하지 못한다. 기업주가 영국인이든, 독일인이든, 중국인이든 간에 노동자들이 착취받는 현실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영국 민족 우월주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우리가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이유 하나는 모든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유럽연합 소속국에서 왔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이 전쟁을 피해서 도망을 왔든 경제적 안정을 찾기 위해서 왔든 이 또한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모두 그들과 형제자매이고 그들을 방어해야 하며 그들이 영국에 와서 살아갈 권리를 보호해 줘야 한다.

우리는 모든 이민자 통제 정책을 끝내길 원한다. 그러므로 유럽연합에 반대하는 주장은 온갖 인종차별주의에 반대하고 이민자들을 방어하는 투쟁과 연결되어야 한다.

또, 민족주의가 아니라 국제주의를 주장한다는 것은 유럽연합에 반대해 그리스 노동자들과 한편에 선다는 의미다.

유럽연합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과 함께 ‘트로이카’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그리스의 가난한 사람들로부터 돈을 빼앗아 은행에 빚 갚기를 원한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에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을 요구하면서 그리스 서민들의 삶은 망가졌다.

유럽연합은 은행·자본가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한다. 그래서 캐머런과 그의 자본가 친구들이 필사적으로 유럽연합에 남으려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패배하길 바라고 탈퇴표가 그들을 흔들어 놓길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투표에서 유럽연합 탈퇴에 투표하자고 주장해야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은 국제 연대에 기반한 반자본주의적 유럽을 위한 투쟁의 일부이기도 하다.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유럽과 세계의 인종차별주의, 신자유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한편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458호 / 번역 이진하

탄저균 사태

한미동맹의 추악한 실체

한규한

5월 말 미국 육군의 생화학무기연구 소인 더그웨이 연구소로부터 미국 국내는 물론 한국의 오산 미군기지와 몇몇 나라들로 살아 있는 탄저균이 배달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생물무기금지협약 위반임은 물론이고, 생물무기 확산에 대한 미국의 온갖 경고가 얼마나 위선인지도 잘 보여 준다.

이 치명적인 생물무기는 어처구니 없게도 민간 택배업체인 페덱스를 통해 배송됐다. 그 과정에서 생화학무기 유출입을 규제하는 관련 국내법은 완전히 무시됐고, 한국의 정부기관 그 어느 곳도 이를 통제하지 못했다. 게다가 탄저균 실험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평택과 군산 기지에서도 실험이 실시됐다는 등 새로운 의혹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는 이 사태를 무마하기에만 급급하다. 지난달 박근혜는 심지어 오바마와 통화를 하면서도 탄저균 사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총리 황교안은 미군의 위법행위를 처벌하라는 요구에 “미국과 특수동맹관계”라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은 ‘주한미군 지위 협정’(SOFA)을 개정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고, 외교부 장관은 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평화적 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라며 두둔했다.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미국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새누리당 대표 김무성은 ‘한국의 전통적인 존경과 감사의 표시’라며 주한미군 사령관 커티스 스캐퍼토리를 등에 업은 퍼포먼스를 했다.

미국 생물무기 개발 역사

미국은 자신이 생물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방어적이고 평화적인 것이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미국의 생물무기 개발의 역사는 아주 다른 현실을 보여 준다.

미국은 제2차세계대전 종전 직후 악명 높은 일본 731부대에서 각종 생물무기 자료를 넘겨 받았다. 미국의 이 더러운 거래 덕분에 731부대 부대장이시이 시로는 전범 재판을 면한 채 연금까지 받으며 노후를 안락하게 보냈다. 미국이 한국전쟁 때 세균전을 벌였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제기된다.

1959년 쿠바에서 피델 카스트로가 집권하자, 미국은 대규모의 생물학 공격을 계획했다. 1960년에는 소련 친화적 공고 정부 수반을 보톨리누스균으로 암살하려 했다(반정부군의 쿠데타 성공으로 실행되지는 않았다).

미국은 심지어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차례에 걸쳐 은밀하게 세균전 실험을 벌였다는 강한 의혹도 사고 있다.

2003년 미국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빌미로 이라크를 침공했지만, 1980년에는 이라크의 후세인이 독가스로 이란 병사들을 죽이고 쿠르드 족을 학살하는 데 일조한 바 있다. 당시 이라크는 생화학무기의 원료를 미국의 ATOC한테서 얻어 왔는데, 미국이



탄저균과 메르스를 합친 것보다 더 위험한 ‘슈퍼 박테리아’ 한미동맹 7월 2일 주한미군의 주둔을 감사하며 주한미군 사령관을 업어 준 김무성.

이를 방조한 것이다.

생물무기금지협약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데 앞장선 것도 미국이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 협약에 생물무기 실험을 강제로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초지일관 반대해 왔다.

거의 모든 무기가 그렇듯이 생물학 무기도 순전히 방어적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다. 방어 목적으로 개발된 세균이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변이되거나 더 강력해진 세균의 출현에 대응해야 한다는 구실로 신종 세균을 개발할 수도 있다. 1990년대 중반 미국은 바로 이런 명분으로 슈퍼 박테리아를 개발하려 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실체와 탄저균 반입을 몰랐다면, 이는 의도된 무지에 가까울 것이다



에어로졸 실험을 준비하는 주피터 프로그램 실무자들.

이번 탄저균 밀반입 사건에서 불거진 이른바 ‘주피터 프로그램’ 역시 이런 이중적 구실을 할 수 있다. 미국과 한국 정부의 주장대로 ‘북한의 공격’을 탐지하는 수단일 수도 있지만, 역으로 진격로 개척을 위한 첨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주피터 프로그램

이번 탄저균 밀반입은 ‘합동주한미군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oint USFK Portal and Integrated Threat Recognition: ‘주피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다.

주피터 프로그램의 직접적 원인은 2007년 부시의 ‘국토안보 대통령지시 21’이다. 오바마는 이를 계승·발전시켜 ‘생물학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전략의 실행’이라는 지침을 내렸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2013년에 시작돼 2015년에 완료될 예정인데, 다양한 종류의 생물무기 공격을 식별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더욱 강력하게 구축하는 것이 그 목표다. 2013년 미국의 제23 화학대대가 한반도에 배치돼 생화학전 능력이 대폭 강화된 것도 이와 관련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그 특성상 다양한 종류의 세균 샘플 실험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 주한미군이 탄저균뿐 아

니라 “지구상 가장 강력한 독소로 규정된 보툴리눔까지 한국에 들여와 실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만하다. 또, 생물무기는 그 특성상 다른 무기체계보다 해당 전장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현지 실험의 중요성이 크다.

게다가 미군의 세균전 실험실은 주피터 프로젝트만을 위한 시설이 아닐 수 있다. 최근 <시사IN>은 이렇게 보도했다. “미군의 한반도 내 세균 실험은 두 갈래로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에지우드 화학생물학센터(ECBC)’의 주피터 프로젝트(실험실 3곳)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 육군공중보건국의 독자적 작전(실험실 6곳)이다.” 가히 한반도 전역이 미국의 세균전 실험장이 되는 느낌이다.

실제 주피터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주피터 프로그램을 한국에서 최초로 실시한 이유 하나로 “주한미군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 실험이 가능”한 점을 꼽았다.

주피터 프로그램은 북한의 생물무기 공격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냉전 종식 후 미국은 일부 ‘악당 국가’들과 테러집단의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과장해 동맹국들을 자신의 정치적·군사적 영향 하에 두려고 했다. 미국 국방부가 4년마다 발간하는 《국방검토보고서(QDR)》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해 동맹국들이 국제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 점에서 ‘국제 공조’라는 말은 미국 주도 패권의 다른 말에 불과하다.

미국이 제기하는 북한 위협론은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과 한국을 단속하고 결속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데 활용돼 왔다. 주피터 프로그램의 책임자 피터 임마누엘은 이 프로그램이 한국에 근거를 둔 이유가 “국방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Pivot to the Pacific) 덕분”이라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말은 이 프로그램 이면에 놓인 진정한 맥락이 무

엇인지를 얼핏 보여 준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실행된 주피터 프로그램 모델을 다른 핵심 동맹국으로도 확산시키고자 한다. 이번에 탄저균이 잘못 배송된 나라 중에는 호주,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는 미국이 주피터 프로그램 같은 모델을 적용하고자 하는 나라들이다.

어떤 면에서 한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주피터 프로그램의 존재와 탄저균 반입 사실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위선이다. 한국이 미국 주도의 생물무기 프로그램 강화 시도에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또, 2012년부터는 해마다 한미생물위협합동연습이 실시된다. 2013년에 한국과 미국은 세계 최초로 ‘생물무기 감시포털’ 구축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주피터 프로그램의 한 축(‘생물감시포털’)과 정확히 일치한다. 특히 지난해 키 리졸브 훈련 때 생물무기 대응이 대폭 강화됐다. 한미연합군은 ‘생물무기 진원지’를 선제 타격한다는 시나리오를 더욱 확대시키기도 했다.

이 점에서 만약 한국 정부가 정말로 이 프로그램의 실체와 탄저균 반입을 몰랐다면, 이는 의도된 무지에 가까울 것이다.

미국이 탄저균을 반입할 수 있었던 것은 불평등한 SOFA 덕분이기도 했다. SOFA 9조는 미군에 타송된 군사화물은 세관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 치명적인 위험 물질의 반입을 막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없는 셈이다. 이 점만 봐도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할 필요를 잘 알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미군의 세균전 프로젝트 자체를 폐기시켜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불안정 요소가 되고 있는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한다. 이번 탄저균 반입 사태는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새삼 환기시켜 준다.

이주노조 우다야 라이 위원장이 말하다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은 10년 투쟁의 성과”

법원이 10년 만에 이주노조 합법화 판결을 내렸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기쁘다. 헌법과 노동법에서 모두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합법화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법관들도 이것을 부정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사실 8년 동안 판결을 미룬 것도 [합법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는데, 이주노조를] 인정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닌가.

대법원 판결 즈음에 ‘공간 총리’라고 불리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4·16연대 사무실 압수수색, 민주노총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를 보고 걱정은 됐다.

지난 10년 동안 투쟁하며 노조를 지켜 온 이주노동자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결과가 있다. 희생도 많이 됐고 단속·추방된 동지들도 많았다. 그럼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인 동지들도 끝까지 연대해서 뒷받침해 준 결과다.

이번 판결로 이주노동자의 권리가 조금이나마 인정됐다고 생각한다.

판결문에서 이주노조의 ‘정치 활동 불허’를 명시하고 노조 합법화가 ‘체류나 취업의 합법화는 아니’라고 단서를 달았다.

오늘 노동청에 [노조설립신고서] 보완 서류를 제출하려 갔는데 근로감독관이 이주노조 규약에 있는 고용허가제 폐지, 미등록 이주노동자 합법화,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추방 반대 등을 가리키며 “앞으로 이런 요구는 자제해야 된다”고 말했다. 나는 이 얘길 들으면서 언제든 정부가 우리를 탄압할 수 있다고 느꼈다.

그런데 미등록 체류자를 합법화하고 단속·추방을 중단해야 노조 활동이 보장된다. 따라서 [이주노조는] 미등록 합법화, 단속·추방 중단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불법 체류’가 문제라면 정부가 정책을 바꿔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면 된다.

이주노조 합법화 이후, 앞으로 어떤 계획과 고민을 가지고 있는가?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이 판결을 보고 “우리가 이겼다”고 말한다. 앞으로 자신의 지역에서 열심히 활동해 보겠다고 하는 동지들도 있다. 우선 이주노동자 밀집 지역에 가서 이주노조를 알리고 이주노조의 지역 지부들을 활성



2004년 이주노동자들은 정부의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 고용허가제 시행에 반대해 3백81일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주노조는 이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졌다.

화할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이 피부로 느끼고 겪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득할 것이다.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는 합법화를 요구하며 함께 싸우자고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 공동체들에서도 축하해주고 노조에 관심을 보이기도 한다. 앞으로 공동체들과 노조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하면서 함께할 방법들을 모색해 갈 것이다. 나는 이주노동자들이 국적별로 나뉘기보다 노조 안에서 서로 섞여 활동하면서 노동자로서 서로 존

중하고 연대감을 키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과 노동운동의 연대 강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건강한 연대였으면 좋겠다. 민주노총과 가맹 산하 조직들이 이주노동자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함께할 동지로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이주노동자를 이주노조로 조직하지만, [기존] 노조가 있는 작업장에서는 [기존 노조가] 이주노동자들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야 한

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주노동자가 [공격에서] 방어받는 데도 효과적이다. 노동자들이 단결하자는 취지에도 이것이 맞지 않은가.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인 일자리 빼앗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 한국 정부가 필요해서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온 것이다. 우리도 그런 취급 받기 싫다. 한국 노동자들도 이런 인식을 바꿔가며 연대를 해 나갔으면 좋겠다.

박근혜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는가?

한국 정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자 이주민들이 쉽게 한국에 오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또 한편] 이주노동자를 필요로 한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강해지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모르는 것 같다. 안보를 내세워 우리를 테러리스트로 몰거나 극히 일부의 범죄 문제로 이주민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시나 차별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우리가 계속 싸워야 정부도 [잘못된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것이다.

8월 30일 고용허가제 시행 11년을 맞아 규탄 집회가 열린다. 이주노조도 적극 조직하겠다. 이 집회에 적극 연대해 주길 바란다.

인터뷰 이정원 / 정리 임준형

고려대 출교 손해배상 재판

법원은 학생들을 부당 징계한 고려대 당국의 책임을 물어야

2006년 고려대학교는 병설보건대학을 통합했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병설보건대학의 자산은 모두 인수하고 등록금도 똑같이 인상했지만, 병설보건대학 학생들의 수업권과 교육권을 제약했다. 또한 고려대 학생들과 병설보건대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함께 구성하는 것도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당시 고려대 당국의 부당한 차별에 학생들이 항의하면서, 자치권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그런데 고려대 당국은 이 시위를 “교수 감금 사건”이라 왜곡·과장했다. 그리고 이를 빌미로 삼심 이견회의 고려대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에 항의한 2005년의 시위에서 주도적 구실을 한 학생들을 표적 징계했다. 그것도 최고 수위의 징계로서, 입학 사실 자체를 말소하는 출교였다. 제대로 된 소명 기회도 없었다.

이후 2년간의 천막 농성과 학내외의 광범한 연대는 법원의 징계무효판결을 이끌어 냈고 우리 출교생들은 복학해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법원 판결로 출교가 무효화되기(출교 징계 이후 1년 6개월간)까지 단 한 번도 우리의 대화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고려대 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 국회의원들의 간곡한 대화 요청도 무시로 일관했다. 심지어 출교된 학생들의 부모들이 찾



2006년 4월 20일 출교 철회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식발식을 하는 출교생들.

아가자 보직교수들은 “부모들이 본관을 점거”했다며 고성과 욕설, 손찌검까지 했다.

또한 2007년 법원이 출교 무효 판결을 내리자, 고려대 당국은 “대학의 심사숙고에 의한 신중한 교육적 판단이 법리적 판단에 의해 훼손”됐으며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고 항소했다. 이후에 법원이 출교무효가처분을 받아들여 우리의 학생 지위를 보전해 주자, 고려대 당국은 학생들의 징계를 유지하려고 출교를 퇴학으로 바꿨다. 이때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이전에 등록금 인상 반

대 시위와 이견회 학위 수여 반대 시위를 주도했고 진보정당 당원이며 극좌파 단체의 회원이라는 점을 징계 사유로 꼽았다. 하지만 법원은 퇴학 징계도 무효로 판결했다.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졸업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예전 징계 기록을 무기정학이라고 바꾸며 몰상식의 끝을 보여 줬다. 끝까지 교육을 내팽개치고 학생들 가슴에 주홍글씨를 새겨 상처를 준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려는 고려대 당국의 시도는 법원 판결로 또다시 무효가 됐다. 결국 모든 징계는 백지화됐고 학적부에는 징계 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반교육적·반민주적 징계

그러나 고려대 당국은 잘못된 징계 결정에 대해 무려 10년 가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고려대 당국이 날조한 ‘감금 일지’는 지금까지도 고려대 학생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지에서 우리를 비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고려대 당국의 주장은 법원에서 수차례 인정되지 못했는데도 고려대 당국은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하지 않았고 자신의 잘못된 주장을 철회하지도 않았다.

부당한 징계 때문에 졸업이 늦어져 우리는 사회 진출에 제약이 생겼고 심

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인터넷상의 악성 댓글로 피해를 보고 있다. 고려대 당국은 우리가 입은 피해를 배상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아쉽게도 3월 26일 대법원은 고려대 당국이 출교생들에게 1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쌍용차 노동자들의 복직을 막고 긴급조치 9호가 불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고려대 당국의 출교 손해배상책임도 면제해 준 것이다.

대법원의 이러한 판결을 비판하고 고등법원에 상식적 판단을 주문하는 사회적 연대가 모이고 있다.

고려대 당국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라는 성명에 민주노총과 전교조 지도자들, 정진후 국회의원, 박노자 교수, 한홍구 교수, 강남훈 교수, 강내희 교수 등 진보적 인사들과 정세균, 이인영,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까지 서명했다.

출교 징계에 맞서 함께 천막 농성을 했던 당시 재학생들 중 졸업 후 교사가 된 이들은 “훈육의 출발은 교육자가 피교육자에게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지, 피교육자를 낙인찍고 배척하는 것이 될 수 없습니다”라며 손해배상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이들도 고려대 출교 사건이 “법조 분야

에 확고히 투신하기로 마음먹게 만든, 저희의 인생에도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사건”이라며 법원의 상식적 판단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고려대 출교 사건은 거의 10년 전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여러 대학 당국의 비민주적이고 일방적인 행정과 구조조정, 그리고 그에 맞선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징계를 모두 철회시킨 것을 넘어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은 우리 운동에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 특히 고려대 출교 징계는 좌파 정당 및 단체 활동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이에 맞서 끝까지 싸워 승리하는 것은 대학 내 사상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져 주는 것이기도 하다.

강영만 고려대 전 출교생

함께 참가합시다!

고려대 출교·퇴학·무기정학 징계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7월 8일(수) 오전 9시 2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정문 앞

손해배상 파기환송심 변론기일

7월 8일(수) 오전 10시 1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고등법원
서관 412호 법정

서울시 교통요금 인상

노동자에게 고통 전담 요구한 박원순 서울시장

김자윤

서울시는 6월 27일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했다. 지하철은 2백 원(19퍼센트), 버스는 1백50원(14퍼센트) 인상됐다. 2012년 이후 3년 만이다.

서울시는 낮은 원가보전율(교통요금에서 승객이 부담하는 금액 비율)로 누적되는 적자, 적자로 인한 안전 설비 투자 미비 등을 교통 요금 인상 근거로 꼽고 있다.

2014년 기준 서울시 대중교통 원가보전율은 74퍼센트 수준으로 다른 나라에 견줘 높은 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앞으로 이 비율을 더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정부의 부담은 줄이고 노동자·서민들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하철 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무임승차를 꼽는다. 지난해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 이용객의 13.7퍼센트로, 비용은 2천8백억 원 정도이다.

무임승차는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이다. 이 제도를 도입한 중앙 정부가 정작 그 비용을 지하철 공사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 진정한 문제다. 그런데 서울시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노동자·서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이를 메우려 한다.

누가 책임져야 하나?

현재 서울시는 미리 산정해 둔 ‘표준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실제 수입금이 그보다 적으면 적자를 보전해 주는 방식의 버스준공영제를 시행하고 있다. 세금으로 버스 회사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심지어 2013년 서울시가 버스업계에 지원한 금액(3천4백억 원) 중 3백43억 원이 부당하게 더 지급됐다는 게 감사원 조사로도 밝혀졌다. 버스업체들은 정비직 노동자 고용인원을 부풀려 보고하거나, 차량 감가상각을 과장해 적정 이윤을 올려 잡아 보조금을 챙겼다. 2013년 버스업체 66곳의 임원 인건비는 2백억 원에 이른다. 준공영제로 버스업체들의 배만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에게 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이것은 실질 임금 삭감이다.

불린 셈이다.

반면에 버스 노동자들은 저임금으로 고통 받는다. 서울시내 버스 운전 노동자들의 일주일 평균 노동시간은 59시간에 이른다. 당연히 버스 노동자들의 피로 누적은 안전과 직결된다.

서울시는 2011년 요금을 인상할 때도 표준운송 원가를 제대로 검토하겠다고 해 놓고는 이제까지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지 않았다. 서울시는 올해 11월에 운송원가 검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한다. 운송원가를 검토하기도 전에 요금부터 올린 셈이다.

서울시는 “경영 개선을 통해 적자를 해소해 2년 뒤에는 요금을 내리겠다”며 불만을 달래려 한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지난해 구조조정 컨설팅으로 악명 높은 맥킨지에 시정 분야 컨설팅을 맡기는 등 비용과 효율을 앞세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요금인상이라는 손쉬운 대안에 이끌리고, 공공성을 약화시킬 지하철 역명 유상 판매나 상업 시설 유치 확대 등에 골몰한다.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또다른 비용 절감 방법이다. 지난해 서울시는 비용 절감을 앞세워 서울지하철과 메트로 양 공사를 통합해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안전을 위한 인력 충원을 오랫동안 요구해 왔는데도 말이다. 같은 이유로 노동자 퇴직금 누진제도 폐지됐다.

한편, 이번 요금 인상으로 버스-지하철 동일요금제가 깨지게 됐다. 서울시 교통본부장은 ‘경전철 민자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차등요금제를 둘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즉 민자 경전철 업체가 지하철, 버스보다 비싼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셈이다.

대중교통은 서울시 교통분담률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이용자의 압도 다수가 노동자·서민이다. 요금이 오른다고 겹어서 출퇴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안전하고 저렴한 대중교통은 노동계급의 삶에 꼭 필요하다. 국가가 대중교통을 책임져야 하는 이유다.



김자윤

결국 문제는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인데, 박원순 시장은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의 문제 등에서 종종 결정적 순간에 정부와의 타협을 택해 왔다.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히는 그는 메르스 대처로 지지가 올라간 상황에서 재정 안정화 능력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듯하다.

박근혜 정부는 재정 적자 등을 이유로 복지를 삭감하고 민영화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원순 시장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복지 삭감 논리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다.

대중교통은 국가나 서울시가 직접 운영하고 관련 재정을 책임져야 한다. 당연히 그 재원은 기업주·부자들의 세금 증세를 통한 국가 재정에서 나와야 한다.

KG로지스택배는 대량해고와 화물연대 탄압 중단하라

KG로지스택배는 지난 6월 말 화물연대 대전지부 KG택배분회 조합원 30명을 해고(계약해지)했다.

우리 조합원들은 모두 간선기사다. 간선기사는 심야에 각 지역과 물류터미널을 오가며 택배물류를 운송하는 화물노동자들이다. 예컨대 나는 매일 저녁 부산지역에서 전국 곳곳으로 배송될 택배물품들을 대전물류터미널로 운송하고, 부산의 각 지역으로 배송될 물품들을 실어 새벽녘에 부산까지 나른다.

KG로지스택배 화물노동자들은 지난 10년 가까이 운송료를 한 푼도 인상하지 못한 채 야간 운송노동을 해 왔다. 기름값이 올라 노동자들의 부담이 커질 때도, 회사는 어렵다는 핑계로 운송료를 올려 주지 않았다.

회사가 수천만 원에 이르는 차량 구

입 비용, 수리비, 지입료, 보험료 등을 노동자들에게 모두 떠넘겨 왔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밤낮으로 쉴 새 없이 일해야 했다. 운송료만으로는 가족들의 생계를 감당할 수 없어 낮에 가스 배달, 학원차 운행, 도배, 부동산, 막일 등 ‘투잡’을 하는 노동자들도 있다. 매일 고속도로 심야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투잡’은 말 그대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다.

사측은 운수회사를 통해 간접계약을 한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용해, 조금이라도 불만을 제기하면 ‘차 빼라’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택배시장의 경쟁 격화 때문에 사측은 노동자들을 더한층 옥죄기 시작했다. KG그룹은 애초에 택배시장 진출을 추진하는 농협에 팔아넘길 요량으로, 지난해 동부택배를 인수해 KG엘

로우택배와 통합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매각이 난항을 겪자, 노동자들을 쥐어짜면서 수익성을 높이려 혈안이 돼 있다. 이미 5월에 KG로지스택배는 간선기사들의 운송료를 10퍼센트나 인하했다. 휴무수당도 빼앗아갔다.

이에 화물연대 KG택배분회 조합원들은 대전물류터미널로 간선차량이 모여드는 새벽 시간에 터미널 곳곳을 돌며 동료 노동자들의 손에 유인물을 쥐어주며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화물연대 KG택배분회는 ▲화물연대 인정 ▲본사와의 직계약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다.

사측은 교섭에서는 내내 노조측을 무시하던니, 사퇴한 분회장을 따로 불러 “일부 조합원들만 직계약 하겠다”고 회유하며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 했

다. 이런 분열 책략에 굴하지 않고, 조합원들은 사측에 맞서 함께 싸우자는 호소를 멈추지 않았다. 우리의 호소에 동료 노동자들이 조금씩 호응하면서, 19명이던 조합원이 30명으로 늘어났다. 그러자 사측은 합의에 서명하기로 약속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사측은 태도를 바꿔 조합원들에게는 택배물량을 실어주지 말라고 전국 지점에 지시했다. 12시 30분경에는 전화로 “지금까지의 교섭은 다 무효다” 하고 일방통보했다. 그리고 조합원 30명은 해고(계약해지)됐다. 사측은 대전물류터미널 출입구를 봉쇄하고 조합원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7월 1일에는 KG택배분회 사무실도 폐쇄했다.

회사의 기습적이고 강경한 공격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동료 노동자들로

부터 격리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공격에 굴하지 않고 반드시 일터로 돌아갈 것이다. 조합원들은 6월 29일 대전물류터미널 앞에서 대전지역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함께 결의대회를 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그리고 KG로지스택배의 실질적인 소유주인 KG그룹 회장 박재선이 장로로 있는 수서교회, KG그룹 본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하며 ‘KG그룹의 노동자 죽이기’를 폭로하고 있다.

KG로지스택배가 화물연대를 인정하고 전원 직계약할 때까지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끝내 회사가 물러서지 않는다면, 화물노동자·화물연대 탄압에 분노하는 더 많은 노동자들의 투쟁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권영한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대전지부

KG로지스택배 분회

